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222-0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연구기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연구기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책임자 김명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공동연구원 박민정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정원칠 내모시스 대표이사
연구지원 정은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조원

1. 연구 개요

□ 연구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비중 및 역할 증대로 경제활동 및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 또한 농업,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20대 대선 공약·국정과제에도 여성농업경영인 양성 및 창업 활동 적극 지원이 제시되는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직업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하지만, 농업의 현실은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 기관 부재로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취·창업 활동이 낮음.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교육 담당 지원 기관 및 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다양화·세분화 된 여성농업인의 욕구와 역량 강화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창업 지원 전담기관(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다양한 부처의 사업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분석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중앙·지역 단위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유사 운영사례 및 현황 파악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플랫폼 세부운영방안 마련
- 지원 플랫폼 조직구축·인력배치·업무분장(안) 마련

□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검토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정부, 지자체 유사 지원 플랫폼 및 중간지원 조직 등과 관련한 현황, 행정 및 정책 자료 수집·검토

○ 사례조사(면접조사 병행)

-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 플랫폼, 중간지원 조직 운영 사례 조사·분석

○ 전문가(자문) 회의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조직형태, 적정인력, 인력별 업무수행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무 협의 실시

□ 연구 절차



□ 선행 연구 분석

- 여성농업인 비중 증가와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강혜정 외, 2007; 엄진영외, 2019; 박민정, 2020)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연구는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연구(강혜정 외, 2019) 등과 지원기관으로서의 여성농업인센터 연구(박재홍·이호철, 2003; 이호철·박재홍, 2004; 안상수 외, 2013; 황대용 외, 2008)가 있으나, 중앙과 지역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창업 지원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함
- 다만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세대별 가구 유형별 정책 수요 발굴과 이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엄진영외(2019)의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체계에서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 중요성을 제시한 이순미(2021)의 연구가 시사점을 제시함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 보육, 가족, 여성일자리 및 돌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경우 대체로 중앙지원 플랫폼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앙지원 플랫폼과 광역, 기초 조직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중앙지원 플랫폼이 기초단위의 조직을 지원하는 사례(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있음. 어느 경우이든 중앙지원 플랫폼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사회적경제의 경우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중앙지원 플랫폼 기능을 하며 지원하고 있어 차별적임
-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플랫폼이 부재함. 중앙부처의 농촌여성정책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및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부처처럼 중앙단위의 지원 플랫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경우 농업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지역 내 대학 등 각종 자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문교

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대규모의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처럼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젠더 마인드 및 여성연구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려 여성창업 지원을 특화한 사례로 주목해 볼 수 있음

다양한 플랫폼 운영 사례와 유형

구분	내용
중양단위 플랫폼 운영	<p>촉촉한 전달체계 (중양-광역-기초) (보육)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한국보육진흥원)-시도육아종-시군구육아종(가족)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 중앙(한국건강가정진흥원)-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자리)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한국여성경제진흥원)-광역여성새일센터-기초여성새일센터</p>
	<p>느슨한 전달체계 (중양-기초) (돌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 중앙지원(아동권리보장원)-기초 다함께돌봄센터(귀농귀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센터 : 중앙지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소속 귀농귀촌종합센터)-시군구 귀농지원센터(독립적 조직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부서에서 담당)</p>
	<p>복합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복합 지원: 중앙지원(사회적경제진흥원)-시도단위 중간지원조직-시군구 사회적 경제조직</p>
중양단위 플랫폼 미운영	<p>여성농업인 전달체계 : 시군구 여성농업인센터, 시군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 : 시도 융복합산업지원센터</p>
지자체 특화 운영	<p>경북농민사관학교 : 대학 등 자원연계해 농업인교육 특화 서울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 여성연구기관에서 여성창업 특화 운영</p>

□ 플랫폼 역할과 조직, 인력 구성

- 중양단위 플랫폼 조직은 예외 없이 운영지원·교육과 인력양성·사업지원 조직(또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운영지원 조직은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과 중앙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은 주로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 중간지원조직은 중앙 조직 운영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주로 담당

- 교육과 인력양성은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과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은 주로 지역 센터(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고 일반은 주로 일반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담당
 - 사업지원은 기획·평가와 일반·특성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획·평가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획 및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평가(또는 인증) 작업 진행을 그리고 일반·특성화사업에서는 고유사업은 물론 (지역별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특성화 사업 개발과 진행을 주로 담당하였음
- 중앙단위 플랫폼(중간지원조직) 조직의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의 구성은 지역 센터나 조직의 수와 규모 그리고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규모임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 개요

사업명	운영기관명	인력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센터운영지원팀·보육지원사업팀·양육지원사업팀 등 총 3개 팀 (22명)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돌봄사업부에서 업무 담당(6명_타 업무 함께 담당)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혁신본부, 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본부,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4개 팀(127명 : 2021년 9월 기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여성경제진흥원	기획총괄팀·평가관리팀·역량강화팀·경단예방팀·정책개발팀 등 5개 팀(14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귀농귀촌지원실 등 2개 실(12명)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획관리본부·정책연구본부·창업육성본부·지속성장본부·협동조합본부 등 5개 본부(128명)

주 : 별도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11개 지역별 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센터는 제외

3.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결과

□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구분	의견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부족	▶ 현재 농업정책이나 사업 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부분이 많이 부족해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필요 있음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 민간 조직 공모로 운영되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인 농촌 살아보기의 경우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의 질 편차 큼. 즉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을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 전문성이 취약해 도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강사를 섭외함. 이러한 위탁 운영의 한계가 분명함. 사업의 질 관리나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플랫폼(정책 실행 기구) 구축 필요
여성의 낮은 수혜율	▶ 창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일거리 지원에서 여성 농업인 수혜율이 굉장히 낮음, 지원이 한정되어 공적 영역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남성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수혜를 받으려면 컨설팅 등 많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 과정으로 갈수록 탈락률도 높음.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 조직 필요
홍보 확산	▶ 영농 개선 교육이나 언니네 텃밭과 같은 다양한 특화 사업이 추진되지만, 너무 소규모로 진행되며 위탁을 주기도 해 여성 농업인들이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음. 이러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함
남녀간 격차의 완화	▶ 여성 농업인의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놓고 볼 때는 남녀 농업인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변화를 매개로 해서 기술 변화를 수반하면서부터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어떤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성 대두됨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중앙부서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려움.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중앙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협업이 강화될 수 있음 - 가령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에 홍보 자료를 보내주면 참고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음 -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 현장 상황과 농식품부의 괴리감 같은 것을 느꼈음. 정책 입안 단계나, 현장에서 추진될 때 시뮬레이션이 어려우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이 필요함. 현장 모니터링을 꼭 하면서 사업과 정책이 입안-추진되기를 바람
지역과 하부 조직에 대한 지원	▶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콜라보 사업이 많음. 중앙 플랫폼에서 하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콜라보 사업으로서의 창업 지원을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의 공모서를 써주는 것임. 고급 교육에 진입을 잘 못하는 여성 농업인을 케어하는 역할, 여성 농업인 대상 교육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은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기초 단위의 하부 조직까지 필요함. 중앙의 지원 플랫폼은 하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성인지나 농업 기술센터 강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 필요	▶ 전반적으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함. 일선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환경 변화에 맞춰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저항이 커 어려움. 지방이양 사무이긴 하나 중앙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화하는 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구분	의견
사업 실행 기구	▶ 플랫폼의 기능은 명확하게 사람과 공간, 예산 등 실체가 있는 사업 실행지원 기구 형태로 가야함
정책 모니터링, 환류	▶ 정책연구가 아닌 정책 개발과 환류 기능 필요.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정적 의견을 보임. - 하지만 성평등 지표개발이나 성과 관리, 이런것과 관련된 실무적 직무 개발, 사업의 표준 영역에 대한 가이드, 여성 정책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통계 등)를 계속 생산해내고 체계화하는 역할은 필수라는 의견은 통일성을 보임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표준안 마련·제시	▶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사업을 잘 컨트롤하고 목적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어려움. 농정원에서 2018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표준안은 물론이고 지방이양 사무이지만 한 번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플랫폼의 기능임 -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량의 제한이 없다보니 해야 해서 이것 저것 하며 늘어났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수사업을 내려주고, 그 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
역할/필요 기능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을 변화강화시킬 필요 있으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센터 역할 중에서 보육은 (저출생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 대부분은 고충 상담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현 농촌 실정에 맞게 여성농업인들을 끌고 가는 기능은 약하다고 생각됨.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일선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니 국비를 좀 지원해서 기능을 강화하던지...아니면 센터 기능 중에서 보육은 좀 접고 성평등 정책 개발한다든지 해서 센터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플랫폼을 만든다면 옛날 방식은 좀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 성평등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다든지 기존에 하던 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음 - 중간지원 조직이든 농식품부든 여성농업인센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운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해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할 시 센터에 대한 정비, 체계를 잡아야 함. 지역별로 현황이 다르고 역량이 차이도 큼 ▶ 농협 운영이나 어린이집에서 출발해 전환되는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농업인 센터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이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있음. 또한 성평등 여성농업인 정책이나 성평등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조직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 센터를 끼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미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를 기초 단위로 좀더 확대하고, 중앙 단위의 플랫폼에서 공동의 사업을 안내한다든가 역량 강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로 기존 기능이 축소되거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기능을 가진데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농촌 특성에 맞춘 상담 기능이 중요함. 상담 일지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 상담은 아니지만, 농촌의 현실에서 사랑방과 같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부부 간의 평등한 문제를 접하게 하고 인식 개선을 이룰수 있는 면이 있음. 때문에 여성 농업인 센터의 새로운 역할 방향을 이런 측면에서도 모색해 보며 기능을 좀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그런 중간 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 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구분	의견
여성농업인센터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위한 정기적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 필요함 ▶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구성 필요 ▶ 각 센터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 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기회까지 제공 필요
여성농업인 단체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단체를 아우르고 네트워킹 하는 기능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 단체가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화합하지 못함. 중간지원 조직,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 각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도 포함되면 좋겠음 - 여성농업인 단체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나 역할을 넣어야 함 - 지역의 여성 농업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포함 필요 - 현실적으로 여성 농업인 단체의 힘이 강한테 이 단체들을 어떻게 융합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여성 그룹 활동들을 좀 더 발굴해 주고 또 그런 그룹을 이어주는 어떤 횡단적인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기능,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주는 기능이 요구됨
농촌여성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유입 농촌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 여성 농업인들 농촌 여성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틈새 일자리 발굴해 달라는 요구임. 농촌에 정착을 막 시작하는 여성들은 지역 네트워킹이 너무 없어 틈새 일자리 발굴도 어려움. 특히 여성 농업인 단체 네트워킹은 단체끼리 네트워킹이 조금 강한 것 같고 약간 이 단체에 가입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되거나 이런 여성 농촌 여성은 어려움을 겪음. 때문에 청년 여성을 위한 멘토- 멘티 등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 안 전망 커뮤니티 구축 필요
취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육성도 중요한 역할이므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 단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플랫폼 내지는 일자리 전담팀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농촌형 세일센터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연계나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함. 또한 지침과 프로그램, 사람과 조직을 엮어내고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타 조직 설립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접근 필요 - 타 플랫폼 운영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점점 더 그 역할이나 기능들이 커지고, 그래서 규모나 조직이 커지고 전달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들어짐. 초기에는 예산 등의 한계로 필수적인 기능만 담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되어야 할 기능까지 고려되기를 희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가 진행중인 농업농촌 기본 발전 계획에서도 농촌여성진흥원 내지는 여성농업인 진흥원 이런 식의 중앙 단위에 실행지원기구에 대한 의견 있음. 과도기적으로는 위탁 운영 방식이나 기존 공공기관 내 센터(부서)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별도의 공공 기관으로 들어갈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위에 있는 농업 기술센터가 여성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된 경우가 많아, 초창기 모델로는 농업 기술센터를 활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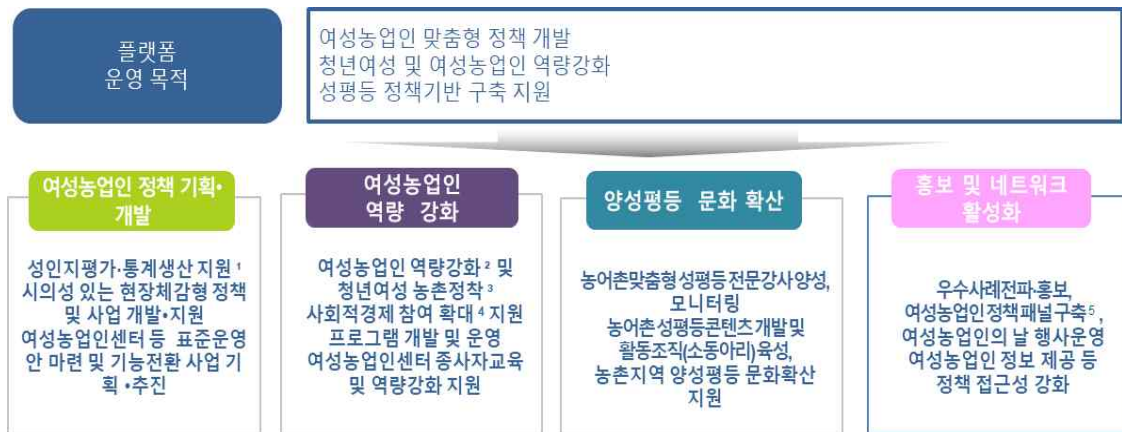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구분	필요성
정책 수요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성장 동력이자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 필요 - 전문교육, 역량강화 과정 등에서 여성의 낮은 수레올 및 남녀격차 완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 다양화 및 확장에 대응
정책 공급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의 취약성 해소 및 안정적 전달체계 확보 ▶ 중앙 행정기구의 한시적 운영 및 행정 라인의 취약성 :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구조' ▶ 지자체 단위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변화 도모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목적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의 운영 목적은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청년여성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지원으로 설정함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기능과 역할



¹성인지 평가지표 마련, 여성농업인실태조사지원 및 농업·농촌관련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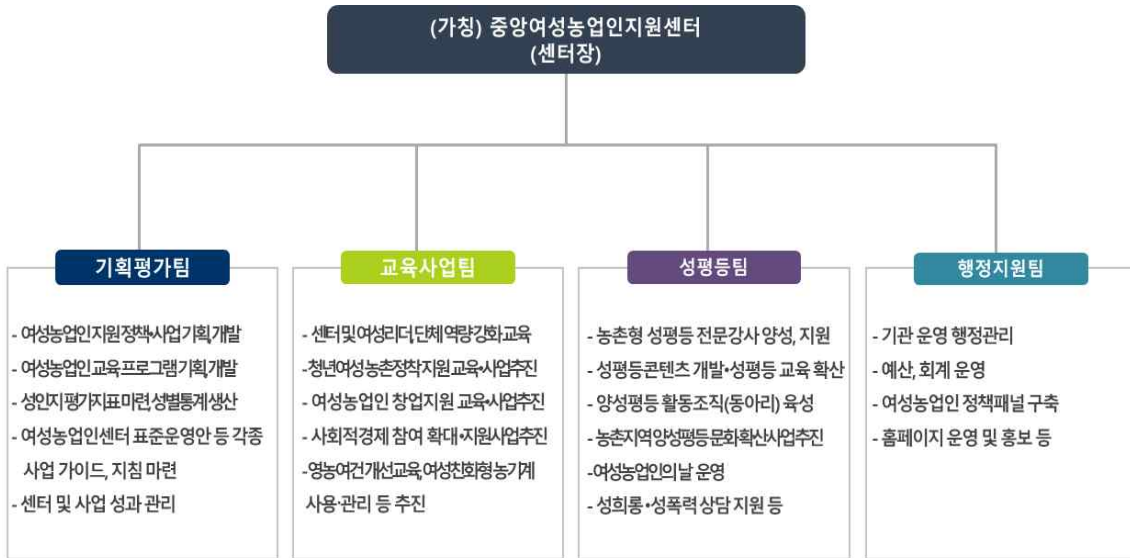
²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용관리, 알기쉬운세무·회계, 여성농업인창업지원교육, 리더역량(기획력, 해외선진지견학, 자격증) 등

³청년여성 농업농촌 일·경험 탐색교육, 청년여성 멘티-멘토 지원 등

⁴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사회적 경제 조직화 유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노노케어, 공동보육, 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⁵여성농업인 홈페이지 개편·운영지원, 양성평등실천 사례 및 홍보, 여성농업인 및 단체 간정보교환 등 소통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수기공모전 운영 등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조직과 인력 운영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부서별 업무분장 및 인원

팀명	인원	업무분장
	센터장 1(3급)	센터 업무 총괄
기획 평가 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센터 및 사업 성과 관리
	팀원 1(6급)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 기획, 개발 여성농업인센터 표준운영안 등 각종 사업 가이드 지침 마련 성평등 지표의 개발·보급, 정보수집과 동향 분석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지원 및 성별통계 생산, 각종 DB 구축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팀원 2(6급)	교육운영 지침 및 가이드 마련
교육 사업 팀 (4)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교육 실적 및 성과 관리
	팀원 1(6급)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리더 등 역량 강화 교육 영농여건 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관리 등 추진 및 상담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 및 협의체 운영
	팀원 1(6급)	청년여성 농촌정착 지원 교육사업 추진 및 상담 (청년대상 농업, 농촌 일-학습 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착사례집 제작배포/ 청년 농업인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및 정착 지원/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팀원 2(6급)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지원사업 추진 및 상담 (창업에 필요한 경영, 회계, 마케팅, 세무, 인허가 관리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농산업 분야 일자리 수요조사 및 컨설팅 제공/ 농업정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온라인 판매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사회적경제참여 확대지원사업 추진 및 상담(사회적경제조직 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화 유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여성일자리 개발·창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성평등 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성평등 교육 확산 지원, 연계 등
	팀원 1(6급)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신규, 심화 교육, 파견 등) 농업·농촌 교육기관, 강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양성평등 활동조직(동아리) 육성
	팀원 2(6급)	성평등콘텐츠 개발(온/오프라인) 및 성평등교육 확산 유관기관 협업으로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날 운영
행정 지원 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팀원 3(급)	예산, 회계 운영
	팀원 3(7급)	여성농업인 정책 패널 구축 및 네트워크, 각종 정보 수집, 홍보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예산(안)

구분	예산	산출내역
운영비	725	- 상근인력 인건비 625백만원(상근인력 15명) - 사무실 경상비 100백만원(임대료·운영비 등)
여성농업인 정책 기획 및 평가	175	- 성인지 평가 및 통계 생산 지원 100백만원 - 표준운영안, 각종 가이드라인 및 지침 생산 지원 75백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단체 등 역량 강화 지원	800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및 영농여건 개선 교육 등 추진 60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단체 여성리더 등 역량 강화 및 여성농업인인 지역활동 리더십 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운영 200백만원
청년여성 농촌 정착 지원 교육·사업 추진	600	- 청년여성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500백만원 - 청년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엔터-멘토 제도 운영 100백만원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지원 사업 추진	950	- 여성농업인 교육, 현장 컨설팅 및 상담 지원 850백만원 -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100백만원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력 육성 및 콘텐츠 개발	350	- 농촌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00백만원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활동조직(소동아리) 육성 150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및 정책홍보 1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설립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사회적경제진흥원처럼 독자적 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조직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운영 등을 고려했을 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위탁가능한 기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구분	장점	단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농, 청년농 육성 및 디지털 농업 확산, 귀농·귀촌 활성화 등 추진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풍부 - 각종 교육 및 농업관련 상담,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네트워킹 등 역량 보유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는 풍부하나 여성농업인 및 젠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업, 농촌관련 조사, 연구,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 발굴·기획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통계 및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강점 - 여성농업인 및 젠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연구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삶의질 정책연구센터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지 않을 것임 - 사업실행 조직으로서의 경험 부족 -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 (예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및 젠더 의식에 강점 - 여성농업인 연구 추진 등을 통한 농촌여성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도 있음 - 연구기관으로서의 강점 외 광역여성새일센터 운영 및 FTA교육홍보사업 선정·추진 등 사업실행 기관으로서의 강점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기관만큼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고, 광역자치체의 위탁의지가 있어야 함

5.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법적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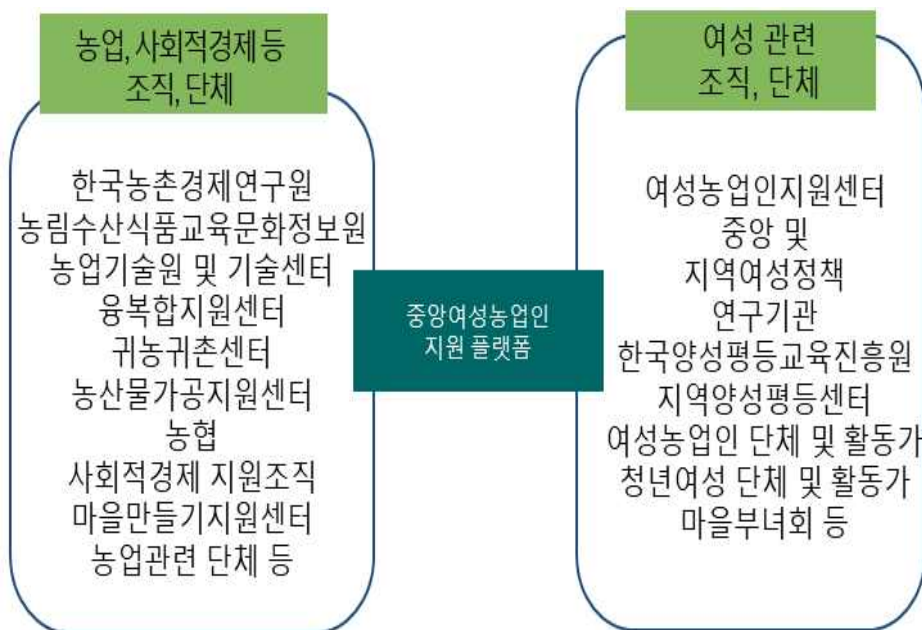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체계 및 여성육성기본계획의 실행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대한 인식은 미흡함. 때문에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13조의 조문 개정이 요구됨
 - 현재의 여성농업인 육성법은 위와 같은 조문체계를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및 실행을 위한 방안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와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음
 - 특히 제 13조는 현재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조문에 포함하고 있음. 때문에 중앙의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문 개정이 요구됨

-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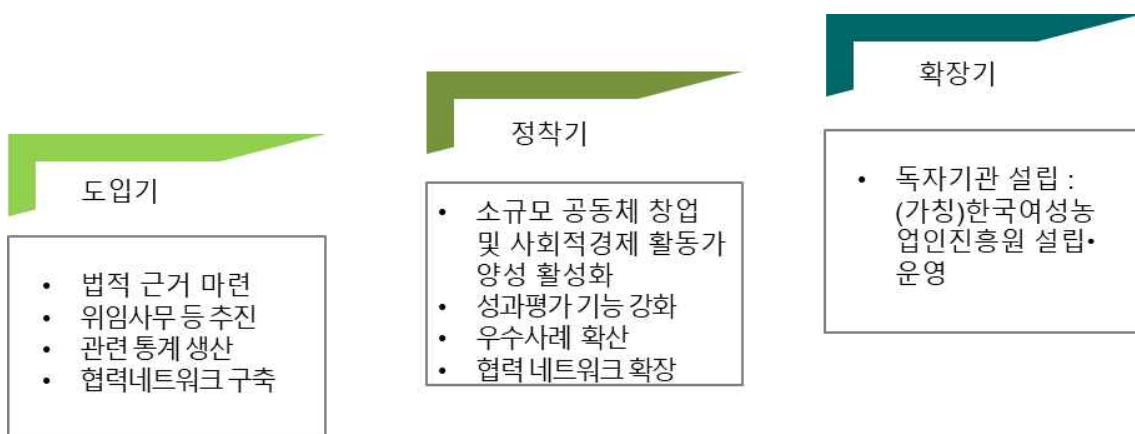
□ 협업체계 구축

- 중앙단위의 지원 플랫폼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의 미약함으로 인해 초기 운영단계에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농업,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해 중앙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과 사업에 대한 기획, 교육운영 등에서 협업할 수 있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는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융복합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협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여성과 관련해 협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중앙단위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각각 정책개발 및 교육 등의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양성평등센터, 여성농업인 단체 및 활동가, 청년여성 단체 및 활동가, 마을 부녀회 등과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칭)한국여성농업인진흥원과 같은 독자적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플랫폼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사무를 일부 위임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역량강화와 기능전환에 대한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기획·추진 및 실행기관으로서의 출발하되, 향후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여성농업인이 특화되어 활동할 수 있는 돌봄과 먹거리 가공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의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기존 정책사업 중에서 여성특화사업을 별도 선정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예산),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예를 들면, 농촌 마을단위 부녀회를 중심으로 돌봄 사업과 먹거리 관련 가공, 유통 등의 마을기업을 묶어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발굴 및 추진
 - 특히 농촌지역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마을단위로 묶고, 마을 부녀회가 지역 주민의 돌봄 주체가 되며 여성농업인센터는 마을 부녀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이에 플랫폼 도입기-정착기-확장기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절차6
3. 선행연구 논의 9

제2장 여성농업인 특성과 정책 추진상 문제점

1. 여성농업인의 특징과 현황3 1
2. 여성농업인 정책의 확장과 변화7 2
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의 문제1 3

제3장 정부·지자체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1. 정부의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9 3
2. 지자체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6 6
3. 시사점 2

제4장 전문가 간담회 조사 결과분석

1. 전문가 간담회 개요 97
2. 전문가 간담회 내용08
3. 시사점 109

제5장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운영방안

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911
2.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주요 역할과 기능421
3.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조직과 인력 운영921
4.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731

참고문헌 142

표목차 Contents

【표 I-1】 여성농업인의 교육 요구	4
【표 II-1】 성별 귀농인구 변화	4 1
【표 II-2】 2021년 연령별 귀농인구 현황	5 1
【표 II-3】 성별 귀촌인구 변화	6 1
【표 II-4】 귀촌여성의 연령대별 비중변화	6 1
【표 II-5】 2021년 연령별 귀촌인구 현황	7 1
【표 II-6】 농업부문 종사상 지위별 고용현황	8 1
【표 II-7】 농업부문 성별 종사상 지위 변화	9 1
【표 II-8】 여성농업인의 가구 및 연령대별 특성 및 영농실태	3 2
【표 II-9】 단독 가구: 영농형태별 특성 및 영농실태	4 2
【표 II-10】 2인이상 가구: 영농형태별 특성 및 영농실태	5 2
【표 II-1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차수별 전략과제와 추진과제 변화	7 2
【표 II-1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차수별 신규과제	8 2
【표 II-13】 농촌 여성정책팀	1 3
【표 II-14】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변화	2 3
【표 II-15】 도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4 3
【표 II-16】 2021년 활동범주별 사업 건수	4 3
【표 II-17】 도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비율 및 규모	5 3
【표 II-18】 여성농업인센터별 운영 현황	6 3
【표 III-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위탁운영) 조직 구성	1 4
【표 III-2】 지역아동돌봄사업부 내 다함께 돌봄센터 담당자 및 업무	5 4
【표 III-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직 및 인력 구성	9 4
【표 III-4】 여성가족부 제시 표준 시·도 가족센터 조직구성	9 4
【표 III-5】 중앙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4 5
【표 III-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추진 과정	5 5
【표 III-7】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	6 5
【표 III-8】 귀농귀촌센터 업무 및 인력구성	1 6
【표 III-9】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조직 및 인력 구성	4 6
【표 III-10】 2022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5 6

【표 III-11】	경북농민사관학교 2022년 주요 교육과정	7	6
【표 III-12】	경북농민사관학교 조직과 인원	8	6
【표 III-13】	다양한 플랫폼 운영 사례와 유형	3	7
【표 III-14】	운영 사례 조직 및 인력 구성에서의 유사점	4	7
【표 III-15】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 개요	5	7
【표 IV-1】	전문가 간담회 참여대상과 주제	0	8
【표 V-1】	부서별 업무분장 및 인원	231	
【표 V-2】	소요 예산	331	
【표 V-3】	세부 소요 예산	431	
【표 V-4】	운영주체별 특성	531	
【표 V-5】	위탁 기관 예시	631	

그림 차례

【그림 I-1】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역할	3
【그림 II-1】 성별 농가수와 농가인구수 변화	3 1
【그림 II-2】 귀농여성의 연령별 비중 변화	5 1
【그림 II-3】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농업 취업자 비중	8 1
【그림 II-4】 2020 농업인 및 경영주 인구 피라미드	0 2
【그림 II-5】 여성 경영주의 경영 특성	1 2
【그림 II-6】 여성경영주 중 후계농과 청년농의 변화 추이	1 2
【그림 II-7】 여성경영주 중 농지활용 실태	2 2
【그림 III-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0 4
【그림 III-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체계	4 4
【그림 III-3】 가족센터 운영체계	7 4
【그림 III-4】 시·군·구 가족센터 조직	0 5
【그림 III-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체계	2 5
【그림 III-6】 한국여성경제진흥원(중앙새일지원센터) 조직 구성	3 5
【그림 III-7】 지역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일반적 조직 구성	9 5
【그림 III-8】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직 구성	0 6
【그림 III-9】 지원조직 및 협동조합 간 관계도	5 6
【그림 III-10】 경북농민사관학교 비전과 목표	6 6
【그림 V-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목적 및 역할과 기능	8 2 1
【그림 V-2】 여성농업인 지원플랫폼 및 전달체계	0 3 1
【그림 V-3】 여성농업인 지원플랫폼 조직 구성	1 3 1
【그림 V-4】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협업 기관, 단체 예시	8 3 1
【그림 V-5】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단계별 발전방안	9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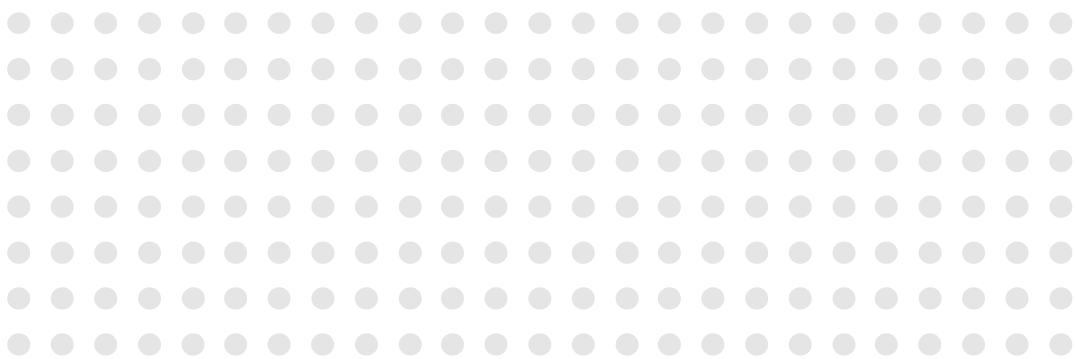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절차
3. 선행연구 논의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 역할 증진 및 경제활동,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 증대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비중 확대 및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역할 증진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는 갈수록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음



자료 : 강혜장·김윤형·박서운(2019),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p. 25; 오미란(2021),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상북도의회, p. 14. 재인용

【그림 I-1】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새로운 역할

-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이 62.5%로 높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는 농산물 판매(41.6%), 농업 임금노동(24.3%), 농산물 가공(23.2%)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4.17.)

- 농업, 농촌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직업역량 강화 정책은 전통적인 작목 위주 농업생산 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산업분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필요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자동차 설비 운전,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판매·마케팅,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업생산기술 등 직업역량 교육에 관한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판매·마케팅, 농기계 자동화 설비 운전 등의 교육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1】 여성농업인의 교육 요구

(단위 : %, %p)

교육분야	교육 희망			증감 (B-A)	순위	교육 경험(C)	교육 요구 (B-C)	순위
	'08 (A)	'13	'18 (B)					
취미, 여가, 교양	21.8	24.4	19.8	-2.0	9	30.3	-10.5	14
농업 생산 기술	9.5	15.4	10.8	+1.3	7	14.0	-3.2	13
농산물 가공기술	5.0	10.6	10.8	+5.8	2	9.4	+1.4	4
유통, 판매, 마케팅	5.5	9.9	11.3	+5.8	2	10.0	+1.3	5
부업, 자격증 취득	6.1	8.3	8.7	+2.6	5	3.2	+5.5	1
컴퓨터(블로그 운영)	12.3	7.3	5.6	-6.7	12	6.5	-0.9	10
농기계 자동화 설비운전	소형 농기계	3.4	5.7	+10.3	1	5.9	-0.2	9
	중대형 농기계		4.3			3.1	+1.2	6
	시설 자동화 설비		3.7			2.9	+0.8	7
농촌관광사업 운영	2.0	5.3	5.0	+3.0	4	2.5	+2.5	2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2.5	3.1	2.2	-0.3	8	2.1	+0.1	8
부기, 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0.9	1.5	2.4	+1.5	6	0.9	+1.5	3
자동차 운전	5.0	1.8	1.8	-3.2	11	3.6	-1.8	11
기타(외국어 교육 포함)	4.9	1.5	1.8	-3.1	10	4.7	-2.9	12

주1. 여성농업인 교육 실태조사('08, '13, '18)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주2. 교육요구는 교육 희망과 교육 경험의 차로 정의

주3. 복수응답(max.3)

주4. '08, '13년도에 측정된 농기계 자동화 설비운전 분야는 '18년 소형 농기계, 중대형 농기계, 시설 자동화 설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조사됨. 해당 3항목을 더하여 농기계 자동화 설비운전 분야 교육 희망 증감을 산출
자료 : 최윤지(2020), 여성농업인의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3차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자료집, p.35

- 하지만, 현실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지원 기관 부재와 사업·교육 담당 지원기관 및 전달체계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 애로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역량강화, 창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영역을 지원하는 기관의 부재로 농촌여성들의 취·창업 활동은 낮음
 -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이 높음에도(62.5%) 현재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은 32.1%에 불과(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4.17.)
 - 농외활동 장애요인으로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23.0%)을 가장 많이 꼽음(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전달 기능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도 필요
 - 인지도 낮은(20% 이하) 주요 항목 : 가족경영협약제도(6.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 주말아이 돌봄방(8.5%), 교육 도우미 제도(9.7%),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10.0%), 사고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10.8%),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및 교육(12.0%),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주 등록(14.1%),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16.3%)(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20대 대통령은 지역소멸 방지·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정, 대선 공약·국정과제에 관련사항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농업경영인 양성 및 창업활동 적극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지원 강화 추진(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지원기관 및 전달체계 부재로 인해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발행하고 있음
 - 민간의 경우 행정·사업역량이 부족, 관계부처·지자체는 조직체계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며,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집행할 추진조직 부재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 지원정책의 체감도 및 활용도 저하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안)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의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는 욕구와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을 전담할 전담기관(플랫폼) 설립 및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아울러 지역단위에서 연계·협업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1.2 연구의 목적

- 중앙·지역 단위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유사 운영사례 및 현황 파악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플랫폼 세부운영방안 마련
- 지원 플랫폼 조직구축·인력배치·업무분장(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절차

2.1 연구 내용

- 중앙·지역 단위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유사 운영사례 및 현황 파악
-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플랫폼·중간지원조직 구축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 사례 발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지자체 사례 등 검토)
-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다양화·세분화에 따른 한계점 분석
- 여성농업인 특성 및 여성농업인 정책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여성농업인센터의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 마련(농식품부 소관에서 '05년도 지자체 이양, 현재 41개소 운영 중이나 지역 여성농업인 지원거점으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및 센터 간 격차 확대)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플랫폼 세부운영방안 마련
- 예산·운영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 근거 마련
- 여성농업인 창업·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중앙·지역단위 플랫폼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분석
- 플랫폼의 역할·기능에 따른 세부 조직 및 예산 운영방안 마련

- 지원 플랫폼 조직구축·인력배치·업무분장(안) 마련
- 중앙·지역단위 플랫폼의 조직형태·적정인력·인력별 업무수행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 농식품부·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분장 방안 마련

2.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검토
 -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정부, 지자체 유사 지원 플랫폼 및 중간지원 조직, 여성·창업 관련 조직 등과 관련한 현황, 행정 및 정책자료 수집·검토
- 사례조사(면접조사 병행)
 -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 플랫폼, 중간지원 조직 운영 사례 조사·분석
- 저문가 자문 회의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조직형태, 적정인력, 인력별 업무수행 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업무 협의 실시

2.3 연구 절차



3. 선행연구 논의

- 여성농업인 비중 증가와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유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 맞춤형 정책 발굴(강혜정 외, 2007; 엄진영외, 2019; 박민정, 2020)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연구는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연구(강혜정 외, 2019) 등과 지원기관으로서의 여성농업인센터 연구(박재홍·이호철, 2003; 이호철·박재홍, 2004; 안상수 외, 2013; 황대용 외, 2008)가 있으나, 중앙과 지역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창업 지원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함
- 다만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세대별 가구 유형별 정책 수요 발굴과 이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엄진영외(2019)의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체계에서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 중요성을 제시한 이순미(2021)의 연구가 시사점을 제시함
 - 엄진영 외(2019)는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욕구를 각 세대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현행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함.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와 예산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가구형태 및 연령별 여성농업인의 영농실태 등을 분석해 정책 인지도 개선(정책 전달체계 개선, 홍보 강화)과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발굴, 세대별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등을 제언함
 - 이순미(2021)는 「지방자치단체 농촌여성 정책추진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불일치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이는 정책 실행 상의 문제, 즉 지자체의 정책 총괄, 책임 주체 불분명과 중앙-자자체-농촌 현장간의 소통과 협의 부재로 보고 있음. 때문에 중앙부터 현장까지의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개선과 개발이 일어나지 않아 정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지자체별 전담 조직 정책 추진 및 농업인 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전담조직이 있는 자자체는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수요자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과 같은 차별성이 나타남. 특히 이러한 성과를 보이는 지역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중간지원 조직 기능을 하고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실행에 있어 중간 지원조직의 역

활과 기능적 효율성을 드러냄. 지자체 농촌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정책 전달을 보장하는 직제 개편과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축,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체의 정책 역량 강화를 제안함

- 박민정(2022)은 「경북 여성농업인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지원기관으로 여성농업인센터(1개소)와 경북 특화형의 농촌보육정보센터(8개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군별로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사업 대상 및 유형, 지속성 등)의 지역별 격차 문제를 제기함.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9개소가 운영되는 제주의 보육 기능 중단과 문화센터와의 차별성 문제 제기 등의 사례를 통해 역할(기능) 재정립과 중앙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함. 이러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개발·시행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여전하며 세대별 맞춤형 정보 전달과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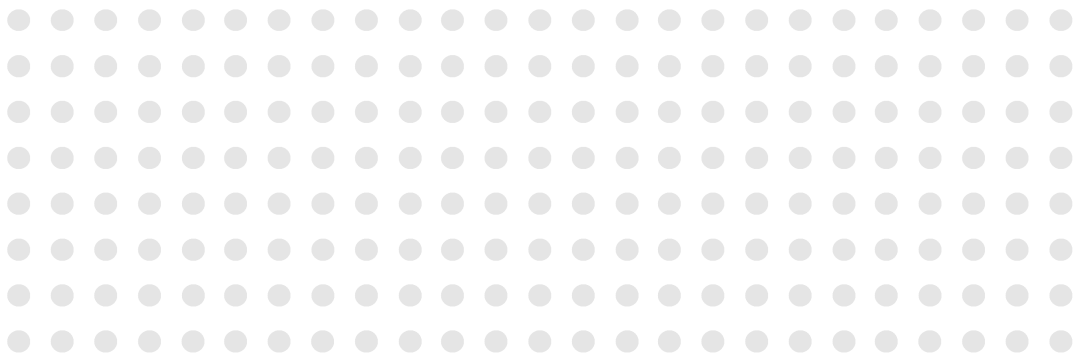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2 장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정책 추진상 문제점

1. 여성농업인의 특징과 현황
2. 여성농업인 정책의 확장과 변화
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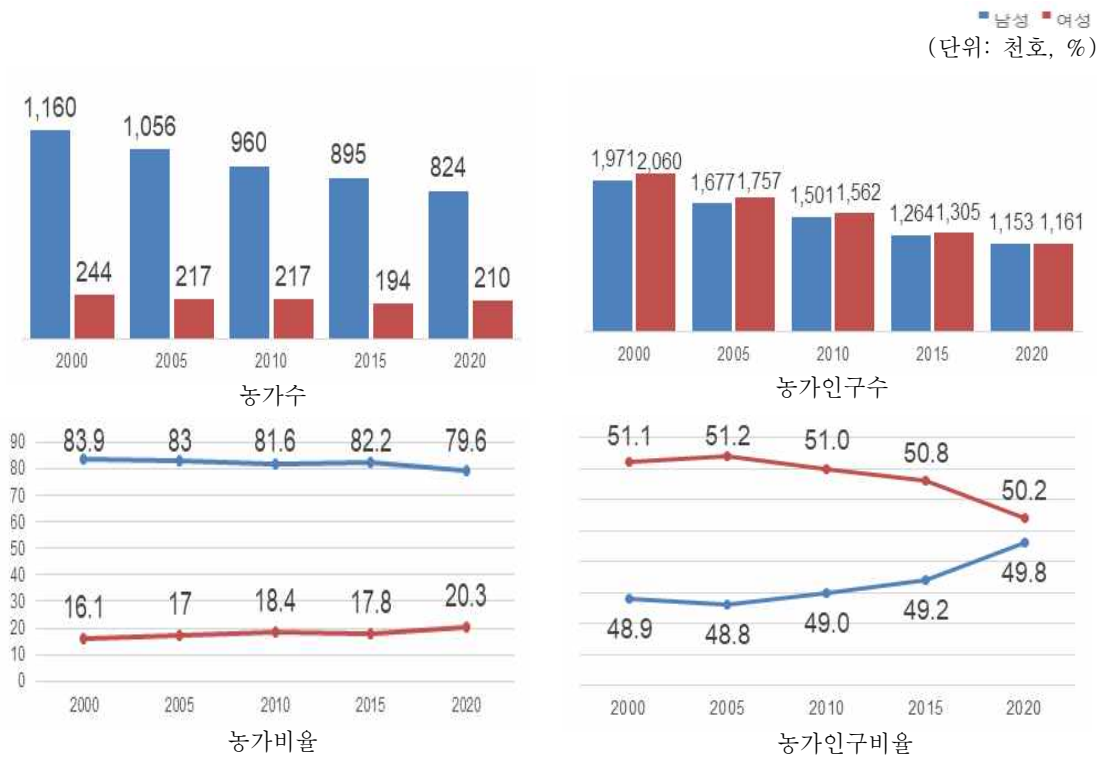
제 2 장 여성농업인의 특성과 정책 추진상 문제

1. 여성농업인의 특징과 현황

1.1 여성농업인 현황

□ 성별 농가 인구 현황과 변화

- 농가인구 중 여성 비중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 농가 비중은 2000년 대비 2020년 4.2% 상승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림어가 총수는 2020년 1035천호로 2015년보다 54천호 감소함. 이중 남성 가구주 농가 감소가 두드러지며, 여성가구주 농가는 2015년 대비 6천호 증가함
 - 농가인구수 또한 지속 감소하며, 2005년부터 여성농가 인구 비율도 감소추세임.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 농림어업중조사, 각연도

【그림 II-1】 성별 농가수와 농가인구수 변화

□ 귀농 귀촌 인구의 성별, 연령별 현황 및 변화

- 귀농인구는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21년 기준으로 여성귀농인은 40.2%이며, 여성 귀농가구주는 32.8%임
 - 귀농인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630명에서 16,181명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 증가하며 2021년에는 귀농인구가 19,776명임. 성별로는 2017년대비 2021년 남성 귀농인수는 670명 더 유입하였으나, 여성은 524명 덜 유입함
 - 성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귀농가구주의 여성 비율은 32.8%인 반면, 동반 가구원 중 여성 비중은 60.2%로 주도적 귀농인은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여성 귀농인 비중 변화를 보면, 귀농가구원수중 여성 비중은 3.0% 감소하고 귀농가구주 비중 또한 1.9%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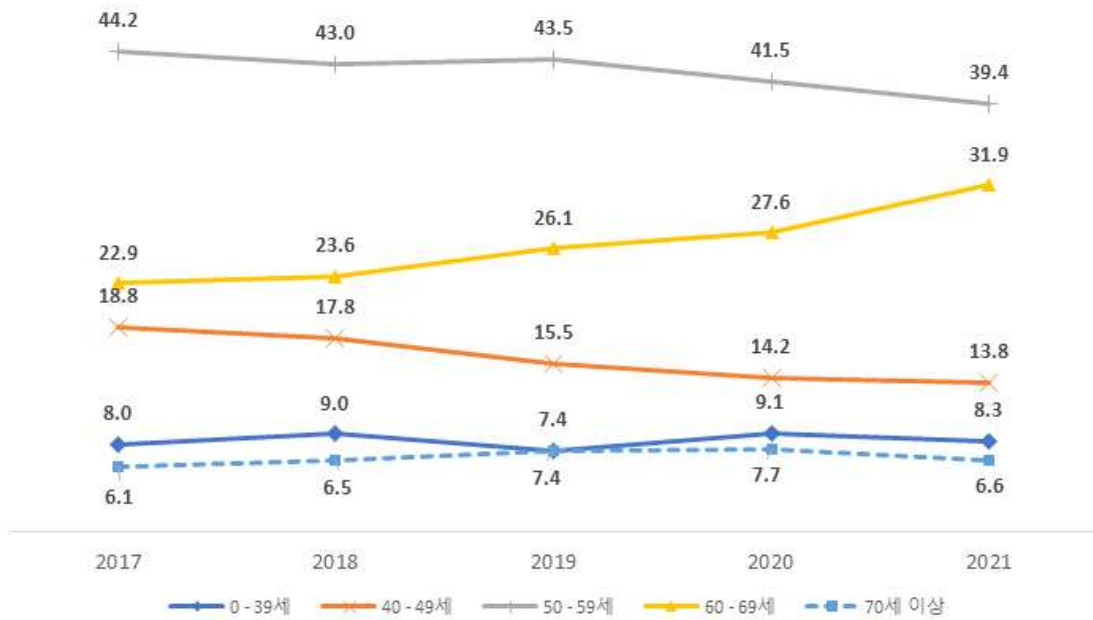
【표 II-1】 성별 귀농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귀농인수 (귀농가구주수)	계	12,763	12,055	11,504	12,570	14,461
	여자	4,254	3,790	3,613	4,074	4,746
	남자	8,509	8,265	7,891	8,496	9,715
	여성비율	33.3	31.4	31.4	32.4	32.8
동반가구원수	계	6,867	5,801	4,677	4,877	5,315
	여자	4,217	3,603	2,881	2,918	3,201
	남자	2,650	2,198	1,796	1,959	2,114
	여성비율	61.4	62.1	61.6	59.8	60.2
귀농가구원수	계	19,630	17,856	16,181	17,447	19,776
	여성	8,471	7,393	6,494	6,992	7,947
	남성	11,159	10,463	9,687	10,455	11,829
	여성비율	43.2	41.4	40.1	40.1	40.2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 귀농여성인구는 50대가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가장 작으며 30대 이하 여성도 2021년 기준 8.3%로 나타남
 - 귀농여성인구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40대, 30대이하, 70대 순으로 나타남. 특히 2017년 이후 50대와 40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0대의 비중은 22.9%에서 31.9%로 9.0% 높아짐
 - 30대 이하 귀농인의 여성 비중은 연도별 변동을 나타내지만, 2017년 8.0%에서 2021년 8.3%로 0.3% 높게 나타남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그림 II-2】 귀농여성의 연령별 비중 변화

- 2021년 귀농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많으나 특히 30대 이하에서 성비격차가 가장 큼
- 귀농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6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아 연령대별 차이를 보임
- 성비는 전 연령대에서 100 이상으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으나 특히 30대 이하에서 284.3으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 60대 순이며 50대가 155.1로 가장 낮음

【표 II-2】 2021년 연령별 귀농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대	여자	남자	계	성비
0 - 39세	396	1,126	1,522	284.3
40 - 49세	653	1,205	1,858	184.5
50 - 59세	1,871	2,901	4,772	155.1
60 - 69세	1,515	3,688	5,203	243.4
70세 이상	311	795	1,106	255.6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 귀촌인구는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21년 기준 귀촌인수 중 여성 비중은 46.6%이나, 귀촌가구주수 비중은 39.2%임

- 귀촌인구의 연간 규모는 2017년에 497,187명, 2019년 444,464명, 2021년 495,658명으로 귀농인구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여성비율도 46.6%로 높은편임
- 성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귀촌가구주의 여성 비율은 39.2%인 반면, 동반 가구원 중 여성 비중은 66.9%임

【표 II-3】 성별 귀촌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귀촌인수	계	497,187	472,474	444,464	477,122	495,658
	여자	236,404	223,779	207,818	223,648	231,033
	남자	260,783	248,695	236,646	253,474	264,625
	여성비율	47.5	47.4	46.8	46.9	46.6
귀촌가구주수	계	334,129	328,343	317,660	345,205	363,397
	여자	125,743	126,640	122,870	134,832	142,547
	남자	208,386	201,703	194,790	210,373	220,850
	여성비율	37.6	38.6	38.7	39.1	39.2
동반가구원수	계	163,058	144,131	126,804	131,917	132,261
	여성	110,661	97,139	84,948	88,816	88,486
	남성	52,397	46,992	41,856	43,101	43,775
	여성비율	67.9	67.4	67.0	67.3	66.9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 귀촌여성은 30대 이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와 40대 순으로 나타남
 - 귀촌여성은 30대 이하가 2017년 49.8%, 2021년 44.9%로 가장 많으며, 70대 이상이 가장 작음
 -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보면 3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귀촌 여성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표 II-4】 귀촌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2017	2018	2019	2020	2021
0 - 39세	49.8	48.8	48.4	46.6	44.9
40 - 49세	15.8	15.5	15.3	15.4	15.1
50 - 59세	16.7	16.8	17.0	17.0	17.3
60 - 69세	9.9	10.5	10.7	12.1	13.5
70세 이상	7.9	8.5	8.6	9.0	9.3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 2021년 귀촌인구는 70대 이상에서만 성비가 100이하로 여성이 더 많으며 30대 이하에서 여성 대비 남성비율이 가장 높음
- 귀촌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30대 이하가 가장 많으며, 남성은 40대와 50대 순으로 귀촌 유입인구가 많고, 여성은 50대와 40대 순으로 귀촌 유입인구가 많음
- 성비는 70대 이상에서 62.3으로 여성이 더 많으며, 그 외 연령은 남성이 더 많음. 40대의 성비가 126.3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녀간 비율 격차가 큼

【표 II-5】 2021년 연령별 귀촌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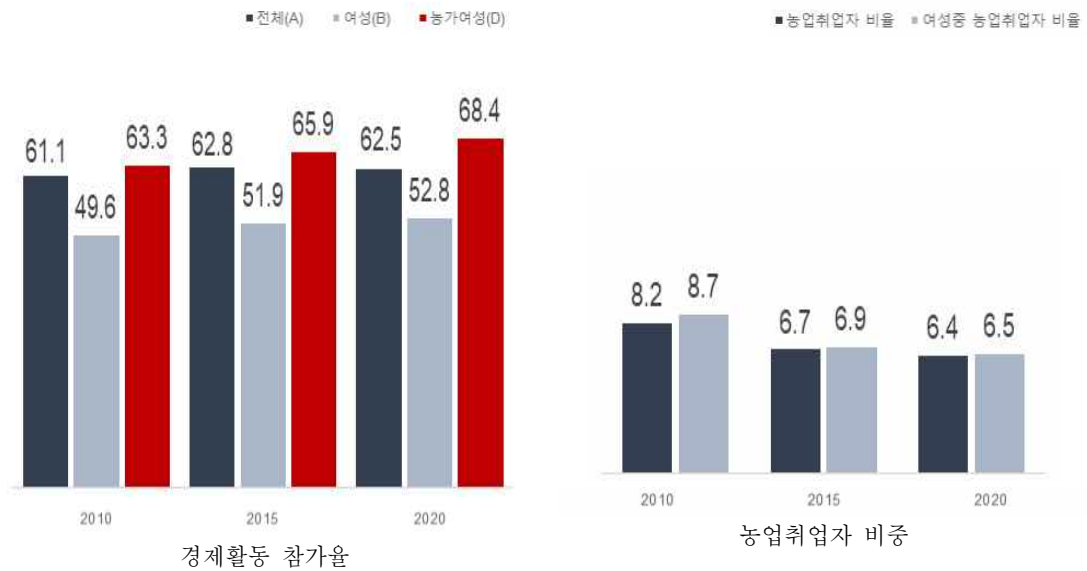
(단위 : 명)

	여자	남자	계	성비
0 - 39세	103,700	128,362	232,062	123.8
40 - 49세	34,836	43,999	78,835	126.3
50 - 59세	39,872	43,722	83,594	109.7
60 - 69세	31,195	35,196	66,391	112.8
70세 이상	21,430	13,346	34,776	62.3

자료 : 통계청, 귀농어, 귀촌인 통계(각연도)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률, 비농가여성보다 높고 증가율도 큼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 뿐 아니라 전체(남녀 합산)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높으며,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함
 -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비농가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활동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전체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 증가한데 반해 농가여성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8.4%로 5.1% 증가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 2022.9.1)

【그림 II-3】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농업 취업자 비중

- 여성 농업인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노동력으로 인식
 -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는 2020년에도 여전히 무급가족 종사 비중이 59.5%로 절대 다수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2.0%임. 특히 남성은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10.3%로 격차가 커, 여전히 여성 농업인 활동이 가족 노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드러냄

【표 II-6】 농업부문 종사상 지위별 고용현황

(단위 : 천명, %)

교육분야	합계		여성		남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임금근로자	77	8.0	30	7.5	48	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0	59.3	126	32.0	443	78.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2.1	4	1.0	16	2.9
무급 가족 종사자	293	30.5	235	59.5	58	10.3
합계	960	100	395	100	566	100

자료 : 통계청 인구 총조사(2020)

□ 경영체 등록 자료로 본 농업 인력의 성별, 연령별 특성

○ 경영주의 성별격차 크게 나타나 여전히 남성 주도 농업형태 드러남

- 농가여성과 달리 경영체등록여성농업인은 전체 인력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남성대 비로 지속 감소 추세임

【표 II-7】 농업부문 성별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명, %)

교육분야		합계	여성		남성
				비율	
농업인	2018	2,442,966	1,122,712	46.0	1,320,254
	2019	2,446,568	1,119,590	45.8	1,326,978
	2020	2,478,680	1,132,774	45.7	1,345,906
경영주	2018	1,658,627	448,337	27.0	1,210,290
	2019	1,686,068	465,683	27.6	1,220,385
	2020	1,730,905	491,217	28.4	1,239,688
공동경영주	2018	26,822	23,949	89.3	2,873
	2019	35,925	31,671	88.2	4,254
	2020	47,176	41,315	87.6	5,861

자료 : 2020 농업경영체 등록연감(2021)

- 여성경영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0%대(2018년 27.0% → 2020년 28.4%)이며 증가률이 낮은 상태임

- 공동경영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수혜자 기준으로 활용되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공동경영주는 2020년 기준 전체 여성농업인 중 3.6%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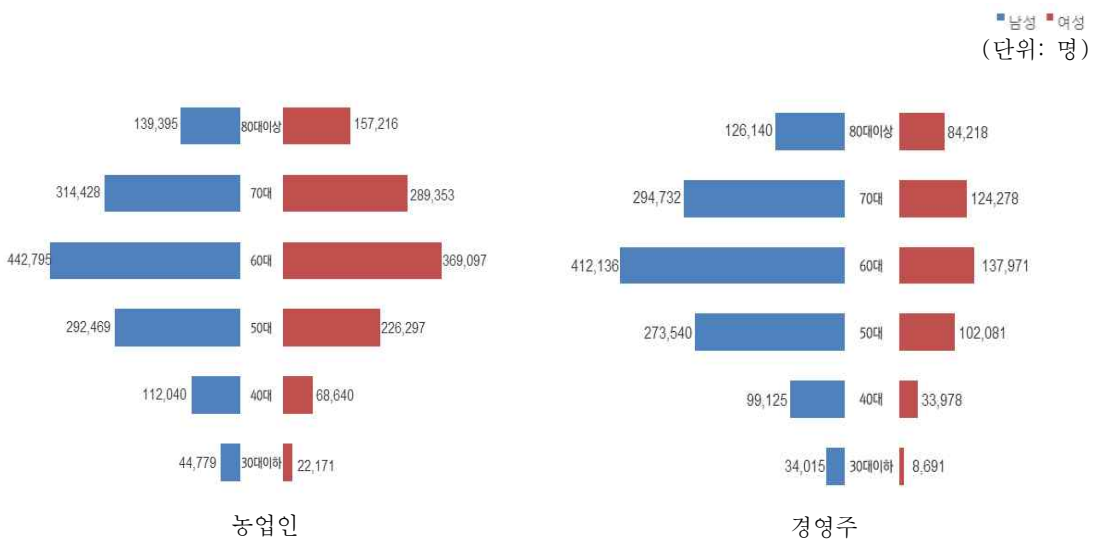
○ 농업인과 경영주 평균 연령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2세 이상 높으며, 청년층과 60대에서 경영주의 성별격차 크게 나타남

- 경영체등록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남 64.0세, 여 66.0세로 여성이 평균 2.0세 높음. 연령대별 비중은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대, 50대 순이며, 40대 이하 비중이 매우 낮음. 또한 8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많음

-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남 64.3세, 여 66.5세로 여성이 2.2세 더 많아 농업인 평균

보다 경영주 평균의 노령화가 더 심함

- 경영주를 연령대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많지만, 연령대별 성별 격차로 보면 30대 이하가 53.3%로 가장 크고 80대 이상은 19.9%로 가장 작게 나타남. 60대는 전체 여성경영주 중 차지 비중이 가장 크지만, 성별 격차는 49.8%로 40대나 50대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남성주도의 농업 경영 형태를 드러냄
-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절반가량이 여성이나 경영주 등록 비중은 28.4%(2020)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여성 경영주 중 70대 이상이 42.4%로 남성 경영주 중 70대 이상(33.9%) 비중보다 월등히 높음



자료 : 농림어업중조사, 각연도

【그림 II-4】 2020 농업인 및 경영주 인구 피라미드

1.2 여성농업인 경영 현황 및 특징

□ 여성 경영주의 경영 특성

- 여성 경영주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 경영 가구, 영농경력 5년 이하, 0.5ha 이하 영농 규모의 비중이 커 영세성 뚜렷
 - 2019년 기준으로 여성경영주는 전체 경영주의 27.6%를 차지하며 단독 경영의 비중이 84.0%에, 평균연령도 65.7세로 남성보다 2.0세 많아 남성 경영주 사망 이후 단독경영주로 전환된 사례가 많음
 - 또한 영농경력 5년 이하가 14.1%로 전체보다 높아, 귀농이나 다른 산업 전환농,

신규 청년농의 유입을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겸업 비중이 낮고 0.5ha 이하의 영세농 비중이 높은 특성이 뚜렷해 고령 농이나 신규유입농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성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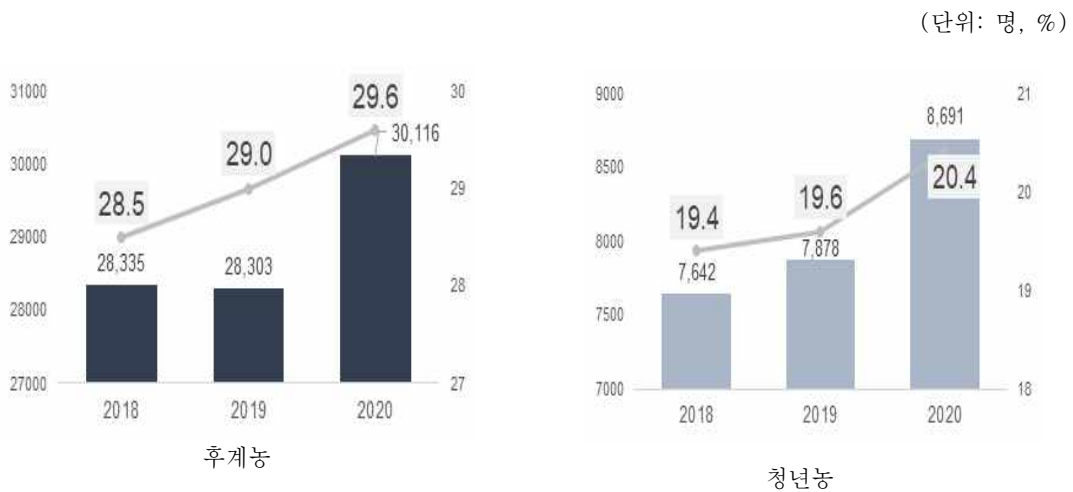
구분	전체 (A)	여성 (B)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단독경영	57.7	84.0							A	←	→	B								
영농경력 5년 이하	11.8	14.1			B															
겸업	26.9	18.9				B	↔	A												
재배면적 0.5ha 이하	58.2	70.1							A	←	→	B								

자료 : 농림어업중조사, 각연도

【그림 II-5】 여성 경영주의 경영 특성

○ 여성경영주 중 후계농과 청년농의 증가 추세

- 여성경영주를 연령, 영농경력, 창업동기 등으로 분류해 여성후계농업인(50대 이하, 경력 5년 이하), 여성청년 농업인(40대 미만), 여성청년 창업농업인(경력 3년미만청년)으로 구분하면, 2018년 이후 후계농과 청년농의 지속적 확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또한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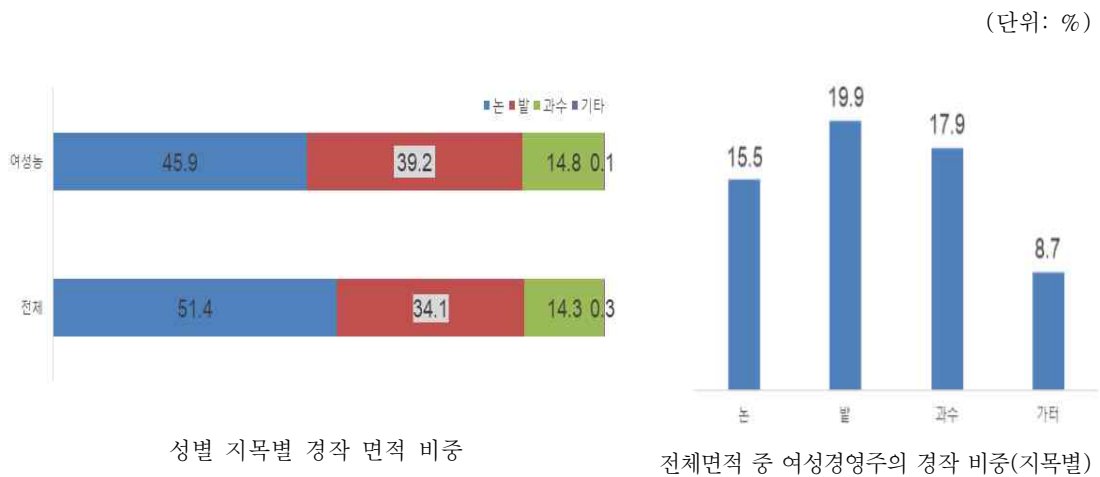
*비율은 전체 후계농(청년농) 중 여성 비중
 자료 : 경영체등록연감분석자료집-농업인력 현황(2020)

【그림 II-6】 여성경영주 중 후계농과 청년농의 변화 추이

□ 여성 경영주의 농지활용 실태

○ 여성 경영주는 밭농사 위주 농지활용에 영세적 경영 특성 뚜렷

- 여성경영주의 지목별경작 면적 비중을 보면, 전체에 비해 밭 비중이 39.2%로 높음
- 여성경영주 비중은 27.6%(2019)인 반면, 경작 면적 비중은 밭이 19.9%, 과수가 17.9%, 논이 15.5% 등으로 나타남. 여성경영주의 낮은 경작 비중을 통해 소규모 영농형태를 드러냄



자료 : 경영체등록연감분석자료집-농업인력 현황(2020)

【그림 II-7】 여성경영주 중 농지활용 실태

□ 가구 및 영농 형태별 여성 농업인 경영 특성

-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엄진영 외, 2019)의 농가경제 조사 원자료(2017) 분석자료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구 및 영농형태별 영농활동 실태를 파악함
- 단독 여성농업인일수록, 고령일수록 낮은 소득 수준에 채소와 논벼 위주의 영농형태 드러냄
 - 엄진영 외(2019)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97.6%가 경영주 등록 여성가구이며, 2인 이상 가구는 8.0%에 불과함. 따라서 단독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영농형태도 차이가 있음
 - 단독가구에서 60대는 논벼와 채소, 70대 이상은 채소와 논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2인 이상은 2종 겸업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70대에서 단독 가구는 채소가 57.2%인데 반해, 2인 이상 70대 이상 가구에서는 27.2%에 불과해 밭농사 중심의 여성농업인 영농 형태를 드러냄

-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농업 소득 및 농외소득 급격히 낮아지나, 단독가구 농가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격차도 크게 나타남
-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70대 농업소득 연 276만원, 농외소득 354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80세 이상에서는 농업소득이 166만원에 농외소득 116만원에 불과함. 이러한 70대 이상의 낮은 소득 수준은 고령의 여성경영주들의 실질적 농업 소득 수준을 드러냄
- 2인 이상 가구에서는 50대의 농업소득이 2,012만원으로 가장 높고, 농외소득은 40대가 4,17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70대 이상은 급격히 낮아지나 동일연령대의 단독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70대 이상의 2인 이상 가구 중 여성경영주 비중이 8.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남성경영주 가구와 여성 경영주 가구의 소득 수준 격차를 추정할 수 있음

【표 II-8】 여성농업인의 가구 및 연령대별 특성 및 영농실태

(단위 : %, 만원)

	단독가구			2인 이상			
	60대	70대	80대이상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여성농업인 경영주 가구 비중	88.9	100	100	12.9	6.6	6.8	8.1
주 영농형태	논벼(23.2%) 채소(23.1%) 2종겸업(18.9%)	채소(57.2%) 논벼(11.4%) 2종겸업(11.2%)	채소(29.9%) 논벼(28.2%) 2종겸업(18.0%)	2종겸업(70.4%) 채소(10.0%) 논벼(7.6%)	2종겸업(48.2%) 채소(15.1%) 논벼(14.1%)	2종겸업(37.7%) 채소(22.0%) 논벼(18.4%)	2종겸업(29.7%) 채소(27.2%) 논벼(19.1%)
연평균 농가소득	1,774	1,477	1,087	6,037	6,055	3,609	2,490
연평균 농업소득	448	276	166	970	2,012	937	692
연평균 농외소득	411	354	135	4,177	2,871	1,350	627

주 :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미만은 가용 데이터 표본 샘플수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 가능하지 않음
 자료 : (엄진영 외, 2019),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

- 단독가구 농가, 70대 이상 경영주에 영농 규모 1ha 이하가 대부분
 - 여성 경영주의 영농형태별 비중은 채소가 44.9%로 가장 높고, 논벼가 15.8%, 2종겸업이 13.9%로 나타남
 - 단독가구 여성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화훼(69.0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농유형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임
 - 경지 규모는 채소, 과수, 논벼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1ha이하의 영세농임. 특히 화

훼와 특작, 축산은 0.5ha 이하가 100%이며, 전작은 80.2%, 2종겸업은 74.7%, 채소는 71.6%가 0.5ha 이하 영농규모를 지님

【표 II-9】 단독 가구: 영농형태별 특성 및 영농실태

(단위 : 세, %, 만원)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2종겸업
여성 경영주	평균연령	75.9	72.1	74.4	76.4	69.0	77.3	79.0	72.5
	60세 미만 비중	0.0	0.0	0.0	0.0	0.0	0.0	0.0	5.58
	영농형태별 비중*	15.8	7.7	44.9	7.4	1.6	6.7	2.1	13.9
경지규모	0.5ha 미만	21.5	10.9	71.6	100.0	100.0	80.2	100.0	74.7
	0.5ha~1.0ha	43.3	45.9	14.7			19.8	0.0	25.3
	1.0ha~2.0ha	28.5	43.2	2.7					
	2.0ha 이상	6.6		11.0					

주 :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미만은 가용 데이터 표본 샘플수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해 사용 가능하지 않음
 * 영농형태별 비중은 전체 단독 가구 전체 여성경영주 중 해당 영농형태 여성경영주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 (엄진영 외, 2019),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 일부자료는 자료 재분석

- 2인 이상 가구의 여성 경영주, 경지 규모 1ha 미만 가구가 50% 이상인 채소, 전작, 특작, 화훼, 2종 겸업 등 영농 형태 종사 비중 큼
 - 영농형태별로 경영주 중 여성 경영주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화훼농가가 1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특작(16.3%), 2종겸업(11.9%), 채소(7.8%) 순이며 그 외는 5%이하의 낮은 비중이 주를 이룸. 하지만 전체 여성 경영주 중 영농형태별 비중은 2종 겸업이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채소가 21.1%로 나타나고 있어 단독 농가와 차이가 뚜렷함
 - 여성경영주의 평균연령은 채소(72.2세)와 기타(89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대 중 후반이며, 화훼농업에서는 62.1세로 가장 젊어 연령대별 주종 농업의 차이 뚜렷
 - 경지규모는 여성 경영주가 집중된 2종겸업(75.1%)과 화훼(67.8%), 여성경영주 가구 비중이 큰 특작(63.6%), 전작(55.1%), 채소(53.2%) 등은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1ha 이하로 규모가 영세함

【표 II-10】 2인 이상 가구: 영농형태별 특성 및 영농실태

(단위 : 세, %, 만원)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 겸업
여성 경영주	가구 비중*	5.1	2.6	7.8	16.3	18.3	4.0	2.6	1.9	11.9
	평균연령	67.7	68.9	72.2	67.9	62.1	66.3	67.7	89	65.8
	60세 미만 비중	1.0	0.7	1.2	7.3	1.3	1.9	0.6	0.9	4.8
	영농형태별 비중	13.4	3.1	21.1	4.8	1.1	1.2	1.8	0.3	53.2
경지 규모	0.5ha 미만	10.7	12.2	31.4	51.5	36.9	39.0	18.8	22.8	50.5
	0.5ha~1.0h a	22.1	25.1	21.8	12.1	30.9	16.1	13.1	18.5	25.0
	1.0ha~2.0h a	28.7	37.5	28.5	11.3	23.7	24.4	26.2	18.7	16.2
	2.0ha 이상	38.4	26.1	18.3	25.0	8.4	20.6	41.9	40.0	8.3

* 가구 비중은 전체 영농형태별 경영주 중 여성경영주 비중을 나타낸 것임
 자료 : (엄진영 외, 2019),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과제, 일부자료는 자료 재분석

1.3 시사점

- 농가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업 농촌의 위축을 드러내며, 여성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가구 농가가 상승하고 있어 여성 농업활동의 확대를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농업 농촌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귀농, 귀촌 인구는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귀농인구에 비해 귀촌 인구가 월등히 많으며 특히 귀촌 인구는 청년여성 유입이 많아 이들에 대한 농촌 정착 및 농업관련 활동을 통한 취창업 연계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 경영체 등록자료 분석을 통해 보면 2020년 기준 경영주 중 여성 비중은 28.4%에 공동경영주도 전체 여성농업인 중 3.6%에 불과할 뿐 아니라 무급가족 종사 비중이 59.5%(남성 30.5%)로 나타나 여전히 남성 주도 농업경영체제 속에서 노동력 제공 자로서의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참여 형태 드러남
- 특히, 여성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6.5세(2020)로 남성보다 더 노령화되어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영주 등록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남성경영주의 사망 후 단독경영주 전환 추세를 드러내고 있음.

- 때문에 여성경영주는 단독 경영 비중 84.0%에 0.5ha 미만 경지 면적 70.1%로 영세적 경영특성을 드러냄. 하지만 귀농이나 다른 산업 전환농, 신규 청년농의 유입 등으로 영농 경력 5년 이하가 14.1%로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청년 농업인 정책에서 청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신규유입농의 농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가구 및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특성에서는 단독 농가 대부분의 경영주가 60대 이상이며 매우 낮은 연 소득 수준(70대 농업 소득 276만원, 농외소득 354만원, 80대 농업소득 116만원, 농외소득 116만원)에 1ha 이하의 영세적 경영규모를 보이고 있어 고령층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잘 보여줌
- 2인 이상은 여성경영주 비중이 화훼(18.3%)에서 축산, 과수(2.6%)로 부부 경영의 경우 여전히 여성 경영주 비중이 낮음을 드러냄. 2인 이상 가구에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농외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여성경영주 중 53.2%가 농외소득 비중이 큰 2종 겸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의 적극적 농외 소득 활동과 연계되어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등록을 확대하는 측면을 유추하게 함
- 선행 연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경영 형태와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가족 경영의 보조자이거나 남성 경영주의 상황에 따른 대체자적 성격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5년 이하의 신규농 중 여성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측면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연령대 및 유입 경로 등으로 세분화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과 활동 형태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 여성농업인 정책의 영역별로 더 세분화된 접근의 필요성 보여줌

2. 여성농업인 정책의 확장과 변화

2.1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과정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과제와 추진 과제변화

【표 II-1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차수별 전략과제와 추진과제 변화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진과제 14개	23개	39개	48개	43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능력 및 리더십 향상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 기반 확충 -노동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농촌개발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여성농어업인 역량증진 교육 지원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 육성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신규 유입인력 정착지원 멘토 육성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전문 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직업적·사회적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 지적 교육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여성농업인 지역사회역할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농어촌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제고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노동경감 및 지원 -건강 및 안전제고 -문화·여가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활성화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와 권리의 인정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확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국제결혼이주농촌여성적응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직업적 권익향상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 추진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정책추진 체계 강화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구축 -여성농업인정책과제 개발연구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정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정책추진 체계의 구축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산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교육 확대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 강화 -여성농어업인 단체와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농촌여성주체 양성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여성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 2001년부터 시행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과제와 추진 과제 변화를 통해 여성 농업인 정책의 대상 범위 및 사업 영역 확장을 분석함
- 14개의 추진과제로 시작된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5차에 이르러 43개 과제로 확장
 - 【표 II-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때 48개로 최대였으며, 5차에는 4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차수별 추진 과제수가 실제 정책의 영역을 명확화하지는 않음. 2차에서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와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의 2개 과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3차에 이르러서는 신규 확장 과제가 늘어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의 1개 과제로 추진하는 등 정책과제의 통합 변경이 다수여서 실질적인 과제는 더 많이 확장됨

【표 II-1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차수별 신규과제

2차	3차	4차	5차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전문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역량증진 교육 지원 ▶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여성농업인 공동창업 지원	전문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축적관리, 인내 및 개선 등 지원(농정원)(신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 취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새인생터' 확대 추진(신규)	직업적·사회적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 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신규)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신규)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신규)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농어촌 지역개발의 리더 육성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사업 확대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 전문도우미 인력 육성 -신규 유입인력 정착지원 멘토 육성 ▶ 귀농 및 이민여성 정착지원 멘토 운영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농촌 현장포럼 지속 확대, 여성농업인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신규)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성공사례 발굴 확산 및 포상(신규)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 마을리더 과정 등 지역역량강화 과정에 '양성평등 가이드' 적용(신규) ▶ 지역개발 전문 여성농업인 등의 DE화 추진(신규)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 지역사회 기여 우수 여성농업인 선정 및 포상(신규)	직업적·사회적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 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신규)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신규)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신규) ▶ 농촌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 실천 모델 발굴(신규) -여성농업인 지역사회역할지원 ▶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연대 구축(신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연금 및 보험수급권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 개발 및 보급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복지부의 원격협진과 연계하여 농업인 전보건의센터 기능 확대(신규) ▶ 다양한 체험형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신규)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복지 정주기반 구축(신규)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로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신규)	복지·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제고 -노동경감 및 지원 ▶ 들녘별 휴게 공간 확충(신규) ▶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체계 개선(신규) -건강 및 안전제고 ▶ 성인지적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신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와 권리의 인정 -국제결혼이주농업여성적응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직업적 권익향상 ▶ 농업경영체등록제 참여 제고	다문화농업인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지침 개정 및 확산 추진(신규)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로 정책 자문기능 강화(신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구현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농업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신규) ▶ 농촌형 성평등 지표 개발 및 보급(신규)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농업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확산 -성인지적 통계의 생산과 활용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교육 확대 * -지자체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강화	▶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개설 및 운영 효율화(신규)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신규) ▶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신규)	
		다양한 농촌여성주체 양성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활성화(신규)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 여성 역량강화 및 정착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포상(신규)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귀농·귀촌 여성 역량강화 및 정착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포상(신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신규)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신규)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신규)

주 : - 진한글씨는 신규 추진과제이며, - 연한글씨는 ▶로 제시된 세부 과제가 신규임.
 * 표시는 양성평등 교육 확대만 신규과제에 속함

-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는 신규과제는 분야별로는 복지와 사회참여·지위 향상이 가장 많으며, 역량강화와 취창업, 신규 인력도 지속적 과제 발굴 분야임
- 복지 분야는 1차 때 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도에서 시작해 여성농업인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 및 돌봄 지원, 행복 바우처와 출산 바우처, 농번기 공동 급식까지 꾸준히 중고령층까지의 대상 확대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음. 5차에 이르러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과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까지 범위를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여성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사회참여·지위 향상은 1차때 여성 위원회 및 협동조합 활동 확대,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등에서 시작해 정책 결정과정 참여와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직업적 지위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정책의 구체화화 내실화를 실현하고자 함. 4차에는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의식과 제도화를 도모함
- 신규 인력 지원 분야에서 꾸준히 정책이 확장되는 과정은 여성농업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정과 일치함. 2차때는 농업·농촌의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하였으며, 3차때는 귀농·귀촌 여성으로 범위를 확장했으며, 4차부터는 고령농, 귀농인,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농촌 여성의 융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5차에 이르러서는 청년농과 귀농·귀촌 여성, 다문화 여성 등 신규농 유입 지원과 지역사회 융합과 함께,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 지원까지 변화되는 농촌의 인력 구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취창업은 2차때 창업 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3차때는 공동 창업 지원, 5차에는 사

회적 경제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여성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역량 강화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및 취창업 지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 지원까지 확대되었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 확장

-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4차 이후부터 교육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신규 인력 지원 관련 정책의 중요성 강화
 - 역량강화는 1차때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문인력화와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작업 기계화 등 영농 활동 지원에서 시작함. 2차에서 여성리더 교육 및 창업 지원까지 확장되고, 3차에는 지역개발 리더 양성을 개별 전략으로 분리하여 과제를 세분화하며 여성 농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구분함. 5차에서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 확대, 영농여건 개선 교육 등을 명시적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농업인 밀착형 교육 운영을 추구함
 - 또한 다문화 여성부터 귀농귀촌, 청년 여성 등 신규 여성농업인을 정책 확대는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적 전략임. 4차에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개별 전략으로 분리하여 각 전략마다 산재되어 있던 신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화 하였으며, 5차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세대간 격차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과 외국인 여성 농업 근로자까지 포함한 현실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변화되는 농촌 환경과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전략 및 정책 과제 변화됨

2.2 시사점

- 1차부터 5차까지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책의 추진 영역의 확장과 함께, 추진 전략의 세부화를 통한 실행의 구체화가 치진되며, 여성 농업인의 정책 과제가 확대되어 옴. 또한 농업 활동 경력 및 농업활동 전 경력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 대상에 따른 정책의 세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

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의 문제

3.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 농축산 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추진 부서

- 농축산 식품부에 농촌여성 정책팀 구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의 기반 구축
 - 2019년 9월 농축산 식품부의 농촌정책국 내에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 정책여성팀을 신설 운영함(한국농정신문, 2021.9.12)
 - 신설 당시 6명의 전담인력(팀장1명 포함)으로 시작되었고, 농촌교육과 문화 영역까지 업무가 확장되며 2020년 12월 1일 1명이 더 총원되어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농촌여성 정책팀은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여성농업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여성 정책팀은 2022년에 2024년 6월¹⁾까지 2년 더 연장이 결정된 한시적 조직이라는 한계점을 지님

【표 II-13】 농촌 여성정책팀

	추진 업무
팀장	업무총괄
여성인력계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
여성복지계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한 농촌적합형 보육여건 마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운영 등
양성평등계	여성농업인의 공동 경영주 등록률 제고와 농촌형 양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 등

1) 2024년 6월까지 5년간의 업무를 평가해 유지나 폐지, 또는 ‘과’ 승격이 결정됨(한국농정신문, 2022.7.15.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08>)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 도단위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및 인력 구성 현황

-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담 인력의 배치는 중앙에서 지역까지 일관성있고 안정적 정책 추진을 담보함. 2022년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소에서 21명의 여성농업인 전담인력²⁾이 구성되어 여성농업인 정책을 실현함
- 하지만 2022년 10월 각지자체 홈페이지 상의 업무 분석을 통해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팀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문관 지정을 취소하고 업무를 유지하거나 여성농업인 외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전담인력 확보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전담팀으로 구성된 충남이나 전남은 인원을 확충하며 충남의 경우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남은 청년농 육성과 농지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

3.2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변화

-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을 통해 유일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해옴. 농촌에 대한 정책 변화와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 등 농촌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중간지원 조직 및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변화되는 추세에 적합한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표 II-14】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변화

	내용	
1차 (01~05)	- 농업경영 및 농촌가정문제에 대한 여성농업인 종합상담사업 추진 - 지자체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센터 기능 수행 - 농번기 보육시설, 농한기 여성농업인 교육·문화공간, 동하절기 농촌체험 학습장 등 다용도 학습 공간	'01년 4개소 시범운영 → '03년 18개소 → '05년 34개소
2차 (06~10)	-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 추가 명시 - 농업 및 가사노동, 지역사회 활동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 부담 증대에	사업 지방이양으로 축소 : '10년 37개소 운영

2) 강원(농촌인력팀 내 여성 농업인 담당 전문관 1명 지정), 충북(농업경영팀 내 전담 인력 1명 배치), 충남(농촌복지여성팀(2명) 설치, 전북(농업정책과 내 전담인력 1명 배치), 전남(여성농업지원팀(2명) 설치), 경북(농촌인력복지팀 내 여성농업인 전문관 1명 지정), 경남(여성 청년농업인 담당팀 1명 설치), 제주(여성농업인 지원팀 3명 설치)

	따른 변화 명시 * '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인 163개소 운영 지원 계획	
3차 (11~15)	-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학습을 통해 육아 부담 완화 - 여성농업인 취미·교양강좌 운영 - 노후화된 센터의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15년 42개소 운영
4차 (16~20)	- 지자체 관할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로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포상 → 기능축소	'20년 40개소 운영
5차 (21~25)	-	'21년 41개소 운영

자료 : 태희원(2018); 최정신 외(2019), 1~5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

- 2001년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지방 이양 이후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도 축소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최정신 외(2019)와 이순미(2021)의 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 최정신 외(2019)는 여성농업인 센터의 지방 이양된 현시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 마련으로 사업 내실화, 위탁 기간의 연장(현 1년에서 3년),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 운영화 마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안함
 - 이순미(2021)는 전국 41개 중 39개 센터의 개별 분석을 통해 각 센터별 격차의 문제를 제시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내의 여성 농업인 센터 역할 부문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농업인센터가 중간지원 조직 및 거버넌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운영 컨설팅 및 사업 개발 등을 담당하는 중앙 차원의 지원 조직 설치 필요성 등을 제안함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 여성농업인 센터의 도별 운영 개소수 차이 크며, 도별로 운영 주체의 차이도 크게 나타남
 - 여성농업인 센터는 2021년 현재 총 41개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제주는 최대 9개소 운영, 충북은 2019년터 미운영으로 현재 0개소임. 여성농업인 센터는 지자체 별 운영 개수의 격차 큼
 - 또한 강원과 전남, 경북, 경남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와 충남 등지는 농협 운영이 많음

【표 II-15】 도별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도(시군수)	센터명(개소년도, 운영주체)	개소수
경기(31)	용인('02, 농), 여주('02, 개), 이천('04, 농)	3
강원(18)	횡성('02), 양구('02)	2
충남(15)	서천('01), 홍성('02), 예산('12, 농), 홍성('15, 농), 청양('17, 농), 예산('05), 공주('19), 부여('20, 농), 태안('20, 농)	9
전북(14)	부안('02), 진안('02), 산내('04), 임실('04), 지리산('05), 고창('05), 백산('09)	7
전남(22)	나주('02), 고흥('04), 무안('06), 장성('11)	4
경북(23)	안동('01)	1
경남(18)	진주('01), 거창('02), 합천('04), 함안('05), 고성('11), 창원('13)	6
제주(2)	함덕('02), 성산('02), 하원('03), 대정('04), 김녕('06), 애월('12), 한경('12, 농), 한림('14), 남원('20)	9

자료 :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2021, 2022), 최정신 외(2019)

- 여성농업인 센터의 2021년 사업을 통한 활동 범주를 살펴보면, 문화, 건강 및 경제/소득이 대부분의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보육 시설은 11개소에 불과함
- 2021년 기준으로 39개 센터별 활동 범주를 보면, 문화, 건강이 38건으로 거의 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소득 사업이 34건, 평생교육 29건, 공부방 27건이며, 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포함된 보육 시설은 11건, 조사, 정책 논의는 7건으로 활용이 줄어든 기능으로 보임

【표 II-16】 2021년 활동범주별 사업 건수

	운영여부		사업수					
	보육시설	공부방	평생교육	경제/소득	교류, 네트워킹	조사, 정책논의	지역 돌봄봉사	문화,건강
총개소수(*39)	11	27	29	34	17	7	20	38
평균사업수	-	-	2.2	3.0	2.2	1.4	2.2	7.7
최소~최대건수	-	-	1~7	1~6	1~7	1~2	1~5	3~20

자료: 이순미(2021) 재구성

- 여성농업인 센터의 도별 사업량과 예산은 어린이집 미운영의 경우 6천 6백부터 최대 1억 8천까지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70%대로 가

장 높음. 또한 농협 운영의 경우 자부담이 30%로 높게 나타나 시군비의 부담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임. 이에 따라 최근 농협 운영 형태의 여성농업인 센터 개소 및 전환 추세가 드러나고 있음

【표 II-17】 도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비율 및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량	예산	도비(%)	시군비(%)	자부담(%)
경기	2	126	22(17%)	93(74%)	11(9%)
	1(어린이집 미운영)	66	11(17%)	49(74%)	6(9%)
강원	2	142.5	28.5(20%)	107(75%)	7(5%)
충남	4(법인)	180	45(25%)	126(70%)	9(5%)
	3(농협)	180	36(20%)	90(50%)	54(30%)
전북	8	130	32.5(25%)	91(70%)	6.5(5%)
전남	4	130	26(20%)	97.5(75%)	6.5(5%)
경북	1	120	36(30%)	84(70%)	-
경남	6	130	26(20%)	97.5(75%)	6.5(5%)
제주	8	97.4	97.4(100%)	-	-

자료 : 최정신 외(2019)

- 2021년 기준으로 39개 센터별로 운영현황을 최대와 최소로 살펴보면, 사업수, 예산, 자부담률,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등에서 도별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8】 여성농업인센터별 운영 현황

(단위 : 건, 만원, %, 명)

	사업수	총예산	자부담비율	인건비비율	운영비비율	참가연인원
최대	23	18000.0	9.0	82.4	21.1	12,017
최소	8	9478.0	0.0	14.5	6.5	435
평균	14	13,172.6	3.4	54.1	13.5	3,358

자료: 이순미(2021) 재구성

3.3 시사점

- 2019년 여성농업인 추진 부서로 농촌여성 정책팀이 구성 운영 되었으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추진 정책 및 과제로 인한 부담 증가와 함께 농촌여성 정책팀이 2024년 6월까지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확산 추세였던 도의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또는 인력 등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 지원 기관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센터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유일한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 기관으로 시작 하였으나, 지방 이양에 따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개별성과 격차로 인해 중앙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지원에 어려움이 따름. 또한 센터별로 1~2명에 불과한 인력에 비해 【표 II-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센터에 요구되는 역할의 다양성은 오히려 역할의 명확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됨.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센터 현장에서는 각센터별 역량차와 사업형태의 차이, 특히 실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 되는 관할 범위(1~2개의 면지역을 관할 범위로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의 문제 등으로 지역 거점 역할에 제약 요소가 많음
-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가 기초단위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정신(2019)와 이순미(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표준화와 객관적 평가와 함께 표준화된 필수 기능과 지역 특화 기능의 구분 등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인력 현실화 등의 변화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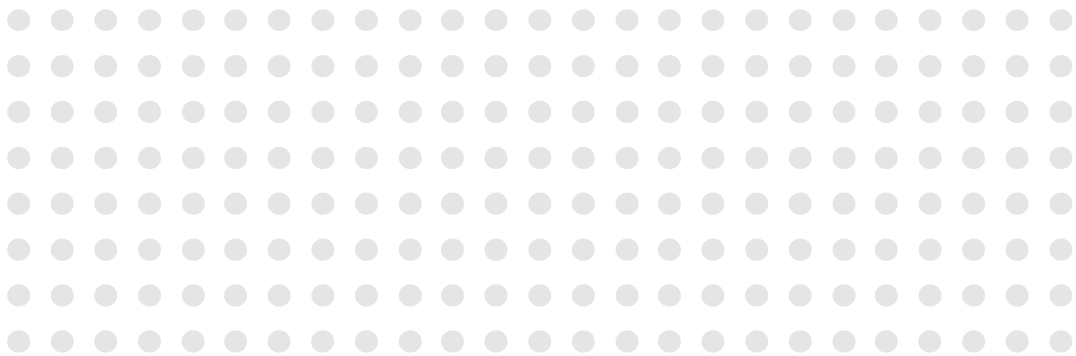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3 장

정부·지자체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1. 중앙정부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2. 지방정부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3. 시사점



제 3 장 정부·지자체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1. 중앙정부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1.1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운영목적과 설립근거

□ 운영목적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전국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관리·지원,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의 보육정책 시행을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

□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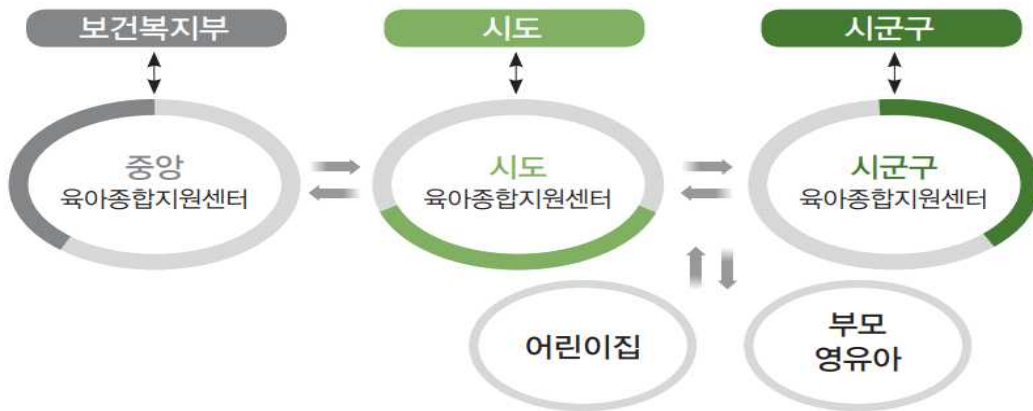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제7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6. 4.,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③ 삭제 <2011. 8.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1. 12. 21.>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p>-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p>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의 명확한 수직적 업무 체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원 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으로 조직이 구성



【그림 III-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3 주요업무

어린이집 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교육사업 지원·보육교직원 상담사업 지원·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사업 지원·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 부모교육사업 지원·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양육상담사업 지원·장난감과 도서 대여서비스 운영 지원·놀이(체험실) 운영 지원·양육정보 제공 등
센터운영 지원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대체교사사업 운영 지원·보육 정보 제공 및 정보지 발간·전산시스템 운영(E-러닝 시스템 외) 등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국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수직적 업무 전달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업무내용은 유사

4 조직구성과 인력

□ 조직구성

- 중간지원조직 체계 (2022년 9월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 시도 센터 18개 > 시군구센터 108개

※ 시군구센터 : 서울 25개, 부산 9개, 대구 1개, 인천 6개, 광주 2개, 대전 2개, 울산 5개, 경기도 30개(경기북부 8개), 강원 3개, 충청 7개, 전라 7개, 경상 10개, 제주 1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원 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으로 조직이 구성됨.

- 사무국장 1명에 센터운영 지원 및 행정 담당의 센터운영지원사업팀과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상담 담당의 어린이집 지원사업팀, 부모교육 및 양육서비스 담당의 가정양육지원 사업팀 등 3개 팀 22명으로 구성됨

【표 III-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 위탁운영) 조직 구성

구분	센터운영지원팀		보육지원사업팀 (어린이집 지원 사업)	양육지원사업팀 (가정양육 지원사업)
	센터 지원	운영지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지원 - 직원역량강화 교육 - 대체교사 운영지원 - 센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행정 및 회계 - 인사·노무관리 - 회계 및 자산관리 - 규정 관리 - 전산시스템운영관리 - e-러닝 시스템 - 통합홈페이지 - 센터업무관리 시스템 - 보육과정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컨설팅 -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 보육정보지 발간 - 열린어린이집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상담 - 어린이집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누리과정 연수 - 표준보육과정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부모교육 기획 및 관리 - 공통 부모교육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부모상담 - 양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총괄: 팀장 1명 - 보육전문요원 6명 (다가치보육 시범 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대체교사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직원역량강화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장 1명 - 보육전문요원 6명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열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개정누리과정 연수/ 표준 보육과정 연수(해설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 1명 - 보육전문요원 5명 (공통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공통 부모교육 기획 및 관리/ 양육 서비스/ 부모 상담) 	

□ 인력

○ 인력 (2021년 말 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2명 > 시도 센터 1,341명 (평균 74.5명, 최소센터 강원 10명, 최대센터 부산 250명) > 시군구 센터 3,857명(평균 36.4명, 최소센터 광주 동구 3명, 최대센터 경기 성남 121명)
- 지역별 인력 격차 뚜렷, 인력 격차 40배 이상 나기도 함

⑤ 예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은 중앙 센터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이며, 시·도 센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받아 운영
- 지원 대상으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설치비는 개소 당 국비 10억 원 한도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가 원칙)
 - 2022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 : 4,942백만원(2021년 대비 57.9% 삭감)
 - 시도 센터는 센터별로 격차가 큼. 강원센터 976백만원, 부산센터 12,942백만원으로 13.3배 발생

1.2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① 운영목적과 설립근거

□ 운영목적

-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확대

-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3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p>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p>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 15.]</p>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p>-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범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8. 4.]</p>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범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범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11. 8. 4.]</p>

② 운영체계

- 중앙차원의 지원 역할은 아동권리보장원(지역아동돌봄사업부)에 위탁 운영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 지원 조직으로는 시도단위에서는 광역 돌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에 서는 기초 돌봄협의회, 개별 다함께돌봄센터(2022년 9월 기준, 775개소)는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지원조직도 체계화되어 있음



【그림 III-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체계

- 운영 방식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 가능(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 규정함

③ 주요업무

-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등·하교 관리나 독서·숙제 지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내용	기본프로그램 : 기본적인 돌봄에 관한 출결 및 급식과 간식 제공 공통프로그램 : 아동의 숙제지도 및 보충지도, 신체활동과 관련된 부분 학습활동프로그램 :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으로 자율적 참여 가능 ※ 서비스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료에 따라 센터별로 요금 상이
돌봄 구분	상시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 정기적 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마을돌봄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포괄하여 구성·운영

4 조직 구성과 인력

□ 조직구성

- 아동권리보장원(4개 본부에 10부 2센터로 구성)에 위탁 운영함.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업무는 아동권리본부 내 지역아동돌봄사업부에서 담당함

□ 인력

- 아동권리본부 내 지역아동돌봄사업부(19명) 중 6명이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함. 각 업무 담당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외 지역아동센터 등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표 III-2】 지역아동돌봄사업부 내 다함께 돌봄센터 담당자 및 업무

	업무 내용
과장 1명	-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조사
대리 2명	-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시스템 개선 및 DB 운영·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컨설팅 기획 및 운영
주임 4명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교육 기획 및 운영,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교육콘텐츠 제작 - 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설치컨설팅 - 다함께돌봄센터 월별 현황(운영 및 시간 연장) 및 시간 연장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다함께돌봄센터 실무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다함께돌봄센터 반기통계 조사, 다함께돌봄센터 질의 응대 및 현황 관리

5 예산

- 중앙 지원조직인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예산은 2022년 기준 24,316백만원이나, 이 중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확인 어려움
- 각센터별로는 설치비 개소당 최대 50백만원(지방비 포함), 기자재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인건비 센터장 1인과 시간제 근무자 2인 인건비(지방비 포함), 운영비 개소당 월 30만원(지방비 포함)이 지원 가능함

1.3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① 운영목적과 설립근거

□ 운영목적

-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

□ 설립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함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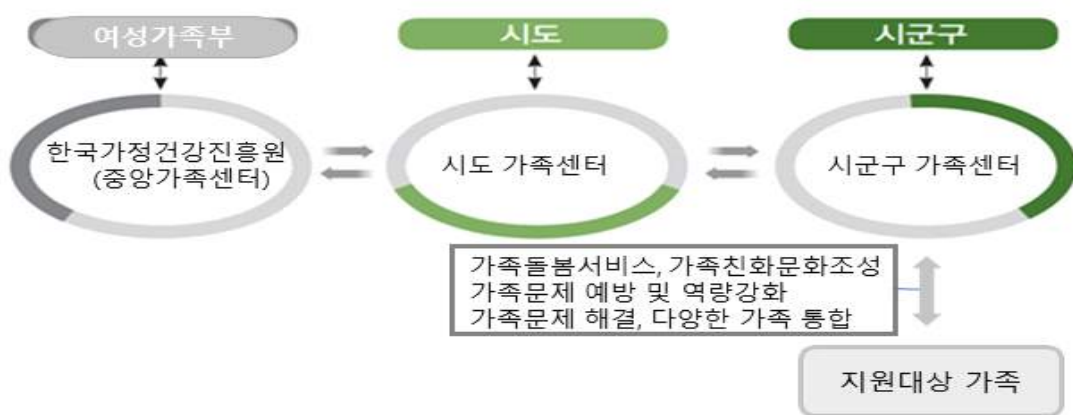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2. 1.]

② 운영체계

-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특수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시도 가족센터 그리고 시군구 가족센터 244개의 수직적 운영체계



【그림 III-3】 가족센터 운영체계

3 주요업무

○ 중앙부터 시도, 시군별로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됨

<p>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가족센터)</p>	<p>가족서비스 운영 기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지역센터) 중앙 관리 지원: 가족서비스 컨설팅 사업, 가족 서비스 성과 관리, 지역 센터 연계 및 협력, 지역센터 사업 관리,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 인증 사업 - 가족 위기 지원 사업: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위기 및 사회적 재난 가족지원사업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운영 지원, 아이돌봄 사업 및 교육 관리 -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교육: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족서비스 전문인력과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컨설팅,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 가족친화 조사 및 연구, 가족친화 네트워크(포럼) 및 홍보 - 지속가능 가족사업 연구 및 확산: 위기 및 사회적재난가족 지원사업, <p>가족서비스 연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서비스소개 및 이용안내, 상담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 양육비이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모니터링 및 면접교섭, 법률지원, 추심지원, 조사지원 및 제재조치 <p>가족다양성수용증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 및 결혼중개업 교육 -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확산: 가족 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가족다양성 정보제공 - 다문화 가족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임신출산갈등상담 0번, 양육비 상담 1번, 한부모가족상담 2번, 심리정서지원상담 3번
<p>시도 가족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군구 가족센터와 연계 -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p>시군구 가족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 생활 교육·상담·문화·돌봄 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4 조직구성과 인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 이사 1명, 경영혁신본부와 가족서비스 전문향상 본부, 가족 다양성 수용증진본부,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3개 본부와 1개원에 각 4개 부서로 총 16개 부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직 및 인력 구성

구분	경영혁신본부	가족서비스 전문성 향상본부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부 부장 1, 부원 9 - 혁신성과부 부장 1, 부원 4 - 창의인재부 부장 1, 부원 9 - 경영지원부 부장 1, 부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부(가족데이터TF) 부장 1, 부원 5(팀장 1, 부원 2) (연구 과제 발굴 및 관리, 환류 계획, 가족포럼 운영 등) - 가족센터협력부 부장 1, 부원 13 (가족센터 사업 및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 관리 외) - 가족전문인력역량 강화부 부장 1, 전문위원 1, 부원 11 (교안 개발 및 교육 교육 모니터랑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외) - 지식정보부 부장 1, 부원 8 (가족지원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양육비 이행관리 시스템 관리, 다누리 포털앱 운영, 교육 시스템, 가족친화 시스템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부 부장 1, 전문위원 1, 부원 6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교안 개발 및 종사자 대상 가족 정책 강의, 교육 관리, 홍보,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 가족친화서비스부 부장 1, 부원 7 (가족친화 인증 관련 업무) - 가족상담서비스부 부장 1, 부원 22 (성과 및 사업 관리, 홍보 및 네트워크, 법률 상담관리 외 14/ 지역 센터 담당 6/ 상담원 2(다누리, 기타)) - 돌봄지원부 부장 1, 부원 9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촉진부 부장 1, 부원 11 - 이행확보부 부장 1, 부원 17 - 위탁지원부 부장 1, 부원 20 - 한시적양육지원부 부장 1, 부원 6
	기관 운영 관련 사업비 집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업기관의 전문성 강화 - 가족정책 개발, 추진 전담 기관 필요 - 가족정책사업 관련 조사 및 실적분석, 성과관리, 홍보, 대외협력 업무 수행 중심기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전달체계 역할 강화 - 가족센터 증가 - 중앙관리기구의 지속적 적극 정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방식의 한계 극복 필요 - 가족정책사업 관리 효율성 증대 	

- 여성가족부가 표준으로 제시한 시도 가족센터 조직은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적합하도록 센터장 1명에 기획운영팀·가족사업팀·교육사업팀·다문화가족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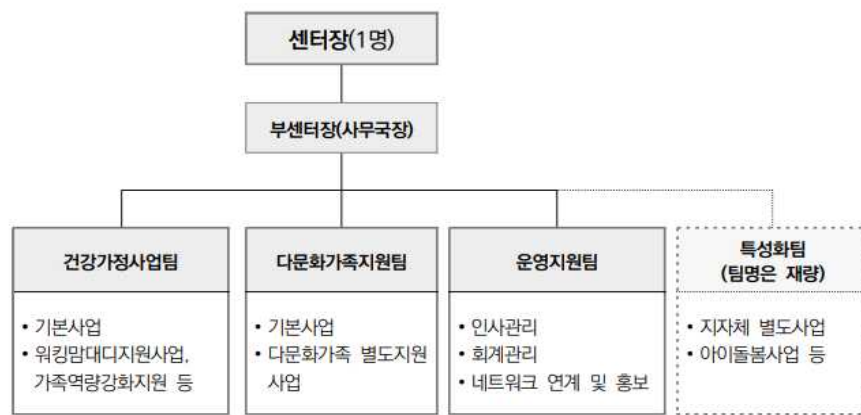
【표 III-4】 여성가족부 제시 표준 시도 가족센터 조직구성

구분	기획운영팀	가족사업팀	교육사업팀	다문화가족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 - 회계관리 - 협의체 구축 - 네트워크 연계 -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 가족 교육 - 가족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종사자 교육 - 한가원과 센터의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지원, 관리, 개발 - 다문화센터 종사자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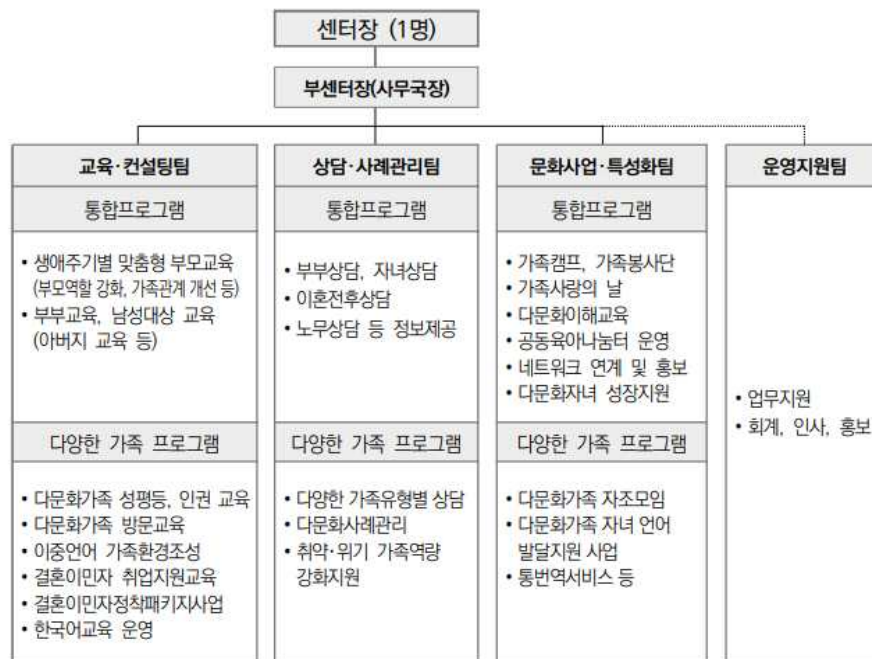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가 표준으로 제시한 시군구 가족센터 조직은 아래와 같이 1 유형과 2 유형이 있음

- 시군구센터 인력은 여성가족부가 가형 9~18명 이내, 나형 8~17명 이내, 다형 7명~16명 이내, 라형 6명~15명 이내, 마형 4명~13명 이내로 밝히고 있으나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실제 인력은 25~40명 안팎으로 운영

(1유형)



2유형



※ 팀별 업무내용은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

【그림 III-4】 시·군·구 가족센터 조직

5 예산

- 중앙 지원기관인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예산은 총 29,039백만원이며 이중 국비지원이 20,113백만원으로 69.3%이며,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8,406백만원으로 18.9%, 사업비가 16,080백만원으로 55.4%임
- 시군구 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액은 ① 가형 : 센터 당 445,600천원, ② 나형 : 센터 당 406,500천원, ③ 다형 : 센터 당 341,700천원, ④ 라형 : 센터 당 302,600천원, ⑤ 마형 : 센터 당 253,900천원이며 여기에 상황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되는 방식

1.4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운영목적과 설립근거

□ 운영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

□ 설립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
-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 2021. 4. 20.>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체계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중앙새일지원센터·광역새일지원센터·지역새일센터지원로 구분되어 수직적으로 운영
-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 법적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그림 III-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체계

③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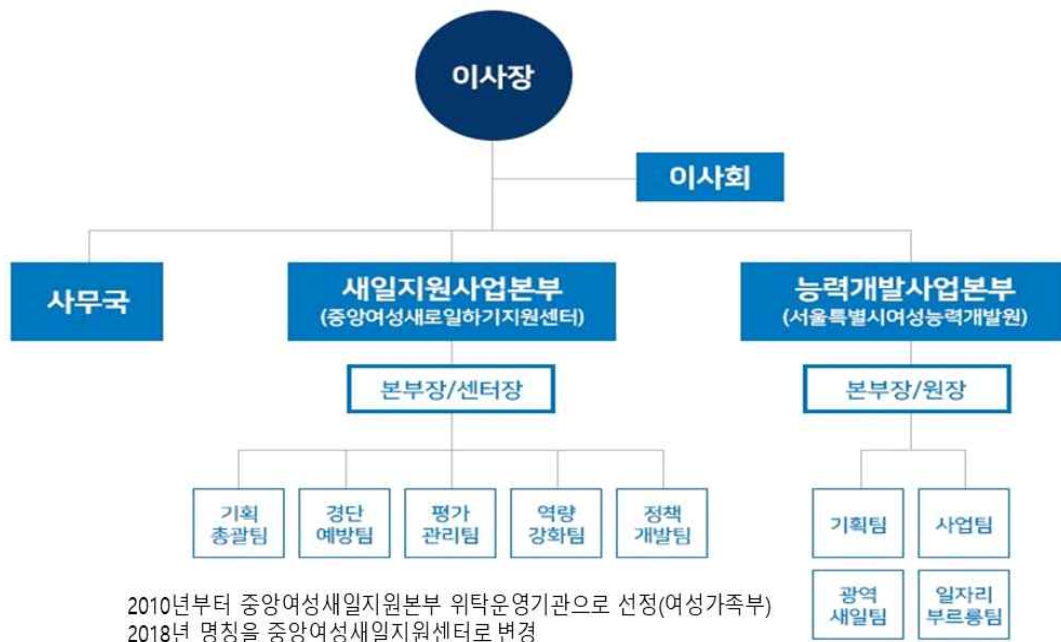
- 광역 새일센터 13개소, 새일센터 총 159개소 운영 중 (2022년 8월기준)이며, 이 중 광역 새일센터는 13개소임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취·창업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 지원, 경력단절협력망 구축, 인식개선사업
취업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지원
직업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4 조직구성과 인력

□ 조직구성

- 중앙새일센터가 속한 한국여성경제진흥원은 이사장 이하 사무국과 새일지원 사업본부와 능력개발사업 본부 등 2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II-6】 한국여성경제진흥원(중앙새일지원센터) 조직 구성

- 중앙새일센터는 본부장 이하 5개 팀(기획총괄팀, 경단예방팀, 평가관리팀, 역량강화팀, 정책개발팀)으로 구성

【표 III-5】 중앙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구분	기획총괄팀	평가관리팀	역량강화팀	경단예방팀	정책개발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총괄 - 새일센터 사업별 지원 - 새일센터 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운영실적 평가 - 새일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심사 및 운영관리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 새일 포상식 - 우수사례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예방 사업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개발 클러스터 운영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인원					

○ 광역 및 기초 새일 센터는 센터장 외에 주로 팀장, 팀원, 취업상담사(창업전담과 경력단절예방 전담 등으로 구분, 센터별로 5~20명)로 구성

5 예산

○ 2022년 기준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25,809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새일 여성인턴 19,462백만원(국비 80% + 지방비 20%)과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19,462백만원(국비 100%) 및 고용노동부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1,587백만원(국비 100%) 등 총 82,740백만원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 운영목적과 설립근거

□ 운영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설립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12. 24., 2021. 11. 3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목개정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② 추진체계

- 2020년 기준 54개소 운영 지원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에서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

【표 III-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추진 과정

단계	과정 및 절차
수요조사	농식품부 계획 시도 통보 → 수요조사 결과 농식품부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	농식품부 신청·접수계획 통보 → 시도에서 시군으로 통보 →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함께 제출 → 접수결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사업 추진	각 센터별 사업 추진 → 이행점검
사업완료	결과 보고 → 정산

- * 사실상 중간지원조직 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
- * 지자체 상황과 기관장 및 담당자 의지에 따른 지역별 격차 발생 불가피

③ 사업대상 및 지원 예산

□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표 III-7】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센터수	10	21	25	27	28	29	29	37	54

□ 지원예산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1.6 농림축산식품부 융복합산업지원센터(6차산업지원센터)

①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 설립목적

- 융복합산업지원센터(6차산업지원센터)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핵심경영체를 육성하고 제품판로를 확대하고자 설립

□ 설립근거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7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 지자체 조례: 광역지자체 1 지역(전라북도)과 기초지자체 48 지역에서 조례 제정 운영

② 운영체계

- 세종시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11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중앙 단위 6차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https://www.xn--6-ql4f73k2zh.com:448/home/bpmsCenter.cs?m=46>)

- 11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시도 지원센터 운영하여 시군 및 개별 단체 및 농가 지원

③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는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과 지역단위 정책수립지원, 6차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6차산업 경영체 육성 있음. 이를 농촌융복합산업 영역과 6차 산업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농촌융복합산업 영역의 사업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 특화품목 1·2·3차 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 → 산업간 연계 →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조성	–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화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여 공동홍보·마케팅·판매 등 공동사업 촉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지원 및 사후관리	–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및 사업화 평가를 통해 지역형 농촌융복합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판로지원으로 경영체 자립화 유도 및 경진대회 개최 등 우수사례 홍보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온라인시스템 관리	– 제품 소비 촉진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 및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시스템 관리

– 6차산업 영역은 사업자 인증·판로지원임·기반조성이 핵심임

사업자 인증	– 인증사업자를 지정·관리하고 인증사업자의 역량강화,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수행.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컨설팅)에서는 현장코칭 및 보육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포털 사이트에 전문위원 정보를 공개하여 역량을 제고하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하는 업무 담당 (2022년 9월 기준 인증사업자 수는 2,147개)
판로지원	– 지역유통망과 연계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과 BI(Beyond Farm)을 연계 홍보하며 지역 대형마트 등을 활용하는 프로모션을 우수 인증사업자 선정 및 홍보와 더불어 추진하는 등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판로지원 및 홍보를 하는 역할 수행
기반조성	–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및 제조·가공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하는 역할

③ 조직구성과 인력

- 시도별 센터의 구성원의 수는 센터장을 포함 5~10명이며, 조직구성은 대체로 인증 관리·현장코칭·판로확대·플랫폼 마케팅임



【그림 III-7】 지역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일반적 조직 구성

1.7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①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 설립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설립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5호, 2021. 6. 15., 일부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15.>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관로 등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운영체계와 주요업무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소속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그림 III-8】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직 구성

○ 전국귀농지원센터 총 144개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총 16개소, 귀농귀촌협의회 총 117개소 및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업

○ 다양한 부서 존재 독립적인 귀농귀촌지원조직(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지원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농촌지원과·농촌정책과와 같은 조직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

-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의 5개과 중 농촌상생과 3개 팀중 귀농귀촌팀이 구성되어 있음

③ 주요업무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귀농귀촌 유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생활 체험 및 주민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귀농귀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 귀농귀촌아카데미(기본공통교육(12h), 유형특화(2h)) 운영, 공모교육과정 선정·평가·점검, 전문강사 발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개발
청년귀농 장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장기간(6개월) 체류하는 실습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등 농산업분야 실무중심 창업지원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주거지 등 기본 정보 제공 및 상담

- 그 외 박람회 출장상담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홍보와 귀농귀촌실태조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등

- 홈페이지 운영 : www.returnfarm.com

④ 조직 구성과 인력

○ 2022년 9월 현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소속 귀농귀촌종합센터장 1명, 귀농귀촌기획실 4명, 귀농귀촌기획실 7명의 상근직 배치

【표 III-8】 귀농귀촌센터 업무 및 인력구성

구분	귀농귀촌 기획실	귀농귀촌 지원실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협의체 운영 등 - 귀농귀촌 유치지원, 협의체 운영, 실 서무 등 - 귀농귀촌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 귀농귀촌기획실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공모교육 - 장기교육, 창업교육 - 맞춤형 공모교육 - 귀농귀촌아카데미, 귀농닥터 - 귀농귀촌 종합상담(2명)
	실장 1, 차장 1, 과장 2, 대리 1	실장 1, 차장 1, 과장 1, 대리 4

○ 지역별 담당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1~6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구례군 6명, 광양시와 흥천군이 5명인 것을 제외하면 1~3명의 담당자를 지정한 곳이 114곳(64.8%)였음

5 예산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 2021년 850백만원에서 2022년 750백만원으로 100백만원 감액(귀농귀촌 통합플랫폼 ISP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문가풀 80백만원, 센터운영 470백만원, 시스템 운영 131백만원, 홍보·평가 69백만원으로 구성
- 2023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 예산 7,620백만원이 배정. 구체적으로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포털 구축 4,275백만원, 맞춤형 상담관리시스템 구축 2,300백만원, 관심정보 알림서비스 구축 670백만원, 정보화구축사업 분야별 전문역량강화 375백만원 등임

1.8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 설립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7. 1. 공포 2010. 6. 시행 2021.8.2] 제20조, 「협동조합기본법」 [2012. 1.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설립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 2. 1.>
 1.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0. 6. 8.]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확장 과정

2011.9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로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장
2014.1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시작
2017.4	2018년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오픈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도시재생법 시행령」)
2021	사회적경제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운영 구조 역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울타리 안에서 복합화되었기 때문임

-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이 점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음. 그 결과 기존 사회적기업 이외에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됨. 또한 2020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지정(「어촌·어항법 시행령」)된 것까지를 포함하면 해양수산부까지 연관성 확장

② 사업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등으로 다음과 같음

고유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위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 교육훈련의 실시 - 협동조합 교류협력·경영지원·교육훈련·행사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지원 -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현장 모니터링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감독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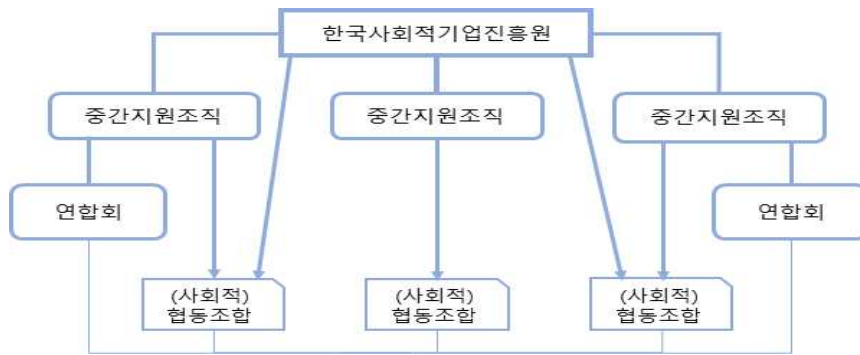
3] 조직구성과 인력

□ 조직구성

○ 조직구성은 2022월 1월 직제개편을 통해 (4본부 1실 16팀 → 5본부 15팀)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2분기 기준 임직원의 수는 비상임 이사 1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28명임

【표 III-9】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조직 및 인력 구성

구분	기획관리본부	정책연구본부	창업육성본부	지속성장본부	협동조합본부
구성	전략기획팀 팀장 1, 팀원 4 경영지원팀 팀장 1, 팀원 7 전문 위원 2 홍보교육팀 팀장 1, 팀원 5	정책지원팀 팀장 1, 팀원 4 (입법 대응 및 정책 개발 지원, 정책 모니터링 등) 조사연구팀 팀장 1, 팀원 4 (실태 조사, 국제협력, DB, 학술 네트워크 등)	인증평가팀 팀장 1, 팀원 10 창업지원팀 팀장 1, 팀원 9 성장지원팀 팀장 1, 팀원 4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관로지원팀 팀장 1, 팀원 8 협업성장팀 팀장 1, 팀원 5 자원연계팀 팀장 1, 팀원 4	제도지원팀 팀장 1, 팀원 6 설립지원팀 팀장 1, 팀원 7 협력운영팀 팀장 1, 팀원 4
	정보화TFT	사회적가치측정 센터준비 TFT			스케일업TFT



【그림 III-9】 지원조직 및 협동조합 간 관계도

- 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매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16개의 중간지원조직과 각 광역시·도가 선정하는 광역 중간지원조직 등이 있음. 2020년 서울지역의 권역별 지원기관은 (사)신나는조합임. 신나는 조합은 협동조합 설립지원, 경영상담 및 현장지원, 조합원 맞춤 교육, 협동조합 홍보 및 연구·정책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III-10】 2022년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지역	중간지원조직	지역	중간지원조직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경기북부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경기남부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전남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coop.go.kr>)

4 예산

- 예산규모는 2022년 계획을 기준으로 총 73,311백만원이고 이 가운데 정부지원 출연금이 72,327백만원(이전수입 2,054백만원 포함)으로 절대적임. 이 가운데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5,87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8.1% 정도 규모임³⁾

2. 지방정부 지원 플랫폼 운영 사례

2.1 경상북도 경북농민사관학교

①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 설립목적

- 경상북도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 마련(2007년 설립)

※ 경상북도의 미래인재 청년농 육성과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전문기관



【그림 III-10】 경북농민사관학교 비전과 목표

□ 설립근거

-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3조(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정관),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시행규칙), 부칙

- 3) 여기에는 16개 광역시·도에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선정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립인가 지원·인가절차·관리 감독 및 운영지원·협동조합 판로지원·청년창업 지원·협동조합 교육과 홍보 및 정책개발 비용이 포함된 것임

② 사업내용

- 2029년까지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3.9만명을 양성하고, 청년창업인재 9천명을 육성하며 농식품 교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고유업무	농식품 교육 플랫폼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위탁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표 III-11】 경북농민사관학교 2022년 주요 교육과정

교육과정	세부 교육과정명
스마트농업	디지털팜 기초, 스마트윈에 및 힐링체험, 스마트축산, 스마트팜, 스마트팜 경영, 시설ICT 채소 생산
6차산업화	6차산업 창농, 경북감 세계명품화, 농가형가공식품 개발, 디지털상품 개발, 로컬푸드 밀키트 상품화,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 천연식초 제조 및 상품화, 한방자원 활용 개발, 농촌경관코디네이터, 농촌관광플래너, 농촌사회복지 플래너, 농촌자원활용 카페 창업, 치유농장 개발 코칭
농업경영	농식품 창업 보육, 최고농업경영자, 협동조합 리더 양성, 창농멘토링, 농가공품 디지털마케팅, 농산물전자상거래, 농식품수출실무, 라이브커머스, 수산업마케팅, 유튜브활용 마케팅
청년농업인	2030청년 스타트업, 청년리더 영농창업, 청년창업특별반
재배실용기술	과수종묘 생산 관리, 딸기 수경 재배, 아열대 과수 재배, 아열대 작물 재배, 유기농업 전문가 양성, 친환경작물재배 기술, 경북한우 사양 관리, 양봉 기초, 유용곤충활용 전문가 양성, 친환경 친척, 친환경 한우 생산, 한우인공 수정, 농기계 자가 정비, 정원관리 기초, 사과다축형 재배 기술
농업자격증	2급이유농업사 양성, 말발굽기술자 양성
마이스터	참외, 인삼, 버섯, 사과, 포도, 시설채소, 복숭아, 딸기, 한우, 양봉 마이스터
별도 모집	귀농귀촌 아카데미

자료 :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www.aceo.kr>) 참고

③ 조직구성 및 운영방식

□ 조직구성 및 인원

- 학교장(1명), 본부장(1명) 아래 4팀(교육운영팀, 미래인재팀, 성과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

【표 III-12】 경북농민사관학교 조직과 인원

구분	교육운영팀	미래인재팀	성과관리팀	행정지원팀
구성	팀장 1 과장 2, 대리 2	팀장1 과장 2, 주임 2	부장 1 (미래인재팀장 겸직) 과장1, 대리 1	팀장1 과장 1, 대리1, 주임 1
업무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운영 지원	-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온라인교육 기획·운영	- 교육평가 및 기획 - 성과분석 관리	- 기관운영 행정관리 - 예산·회계 운영

□ 운영방식

- 관주도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 경상북도 : 예산 지원과 운영 총괄 기획
 - 농민사관학교 : 자체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연구기관 연계 교육 운영, 교육과정 평가
 - 대학·연구기관 : 비교우위가 있는 교과과정 개설 및 교육

4 예산

- 2022년도 총예산은 5,467백만원임. 세부 내역을 보면 출자출연금수익이 1,400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익이 3,906백만원임. 이자수익이 20백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이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0백만원임
- 지출은 총 5,467백만원으로 기관운영비용이 1,560백만원이며, 대행사업비가3,906백만원, 예비비가 1백만원임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1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 설립목적

- '양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

대 여성스타트업 지원공간으로 2020년 12월 임시개관 후 2021년 12월 정식 개관

- 혁신형 여성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지원
- 기업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한 공간 활성화 도모
- 사업목적
 -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지원으로 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제공, 가족 소통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9., 2008.3.12.>”에 기반

② 운영체계

- 서울특별시는 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사업본부에 스페이스 살림 운영실을 위탁 운영함

③ 사업내용과 성과

□ 사업내용

- 과거 미군기지였던 부지인 동작구 대방동에 지상 7층, 지하 2층(연면적 17,957㎡) 규모, 사업비 1,151억원(토지 636억원, 공사462억원, 설계·감리 등 53억원)를 들여 2015년 4월 ~2020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공간에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및 업무지원 공간(입주사 사무실, 공유사무실, 세미나실 등)와 제작과 교육 공간(촬영실, 녹음실, 다목적홀, 메이커교육장 등)을 마련. 여기에 돌봄공간을 마련하여 다목적활동실, 영유아돌봄교실,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함께 운영

□ 주요업무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p>여성혁신 창업 활성화</p>	<p>여성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성장지원: 젠더관점 투자연계와 액셀러레이팅, 온오프라인 판로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 - 다양한 공간 지원: 사무실, 매장, 코워킹 스페이스, 작업장 등 기업유형에 따른 입주공간과 쇼룸, 스튜디오, 라운지, 교육장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 - 여성창업 저변 확대: 글로벌 네트워킹부터 입주 멤버들의 커뮤니티 활동까지 다양한 만남을 운영·지원 - 건강·돌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
<p>일상변화 지원</p>	<p>일상변화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돌봄 변화환경지원: 아동동반공유사무실, 영유아돌봄교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일과 돌봄의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일상 혁신 지원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푸드 스튜디오, 커뮤니티 스페이스 등 다양한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일상의공간 운영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활동 지원 <p>역량강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 역량 강화 지원: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가족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시민 주도 변화 사례화 및 확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를 사례화하고,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 조성

자료 :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http://www.spacesallim.or.kr/space/main/index.do>) 재구성

□ 성과

-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만큼 혁신형 여성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 선발관리 체계화 및 온보딩 시스템을 진행한 결과, 2022년 9월까지 129개사(단독 사무실형, 매장형, 공유사무실, 편집매장 등) 입주·입점 관리 및 기업 수요 반영 핵심역량강화 교육 및 경영컨설팅, 투자·자금 연계 추진
- 핵심역량강화교육(64개사), 경영컨설팅(35개사), 투자맞업(10개사)에 대한 제품·서비스 시장검증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운영
- 일·생활 혁신 플랫폼 스페이스 살림 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공간 활성화 사업 ‘살림 마켓’ 기획 및 운영 (살림 마켓 시민 참여 552명, 기업 및 기관 참여 151개사, 참여자 평가 93% 만족 결과)

4 인력

- 스페이스 살림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 창업 및 돌봄 전문가 등 10여명
- 총 49명 정원 신설(사업 22명, 시설27명)으로 기획

5 예산

- 2022년 핵심사업 예산은 혁신형 여성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에 340,764천원 및 일·생활 혁신 플랫폼 스페이스 살림 공간 운영 및 관리 1,169,094천원으로 전체 여성가족재단 2022년 예산 25,663백만원 가운데 약 5.9% 수준임

3. 운영 사례에서의 시사점

- 이 상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를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플랫폼 운영 형태

- 보육, 가족, 여성일자리 및 돌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경우 대체로 중앙지원 플랫폼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앙지원 플랫폼과 광역, 기초 조직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중앙지원 플랫폼이 기초단위의 조직을 지원하는 사례(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있음. 어느 경우이든 중앙지원 플랫폼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사회적경제의 경우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중앙지원 플랫폼 기능을 하며 지원하고 있어 차별적임
-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플랫폼이 부재함. 중앙부처의 농촌여성정책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및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부처처럼 중앙단위의 지원 플랫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경우 농업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지역 내 대학 등 각종 자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대규모의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처럼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젠더 마인드 및 여성연구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려 여성창업 지원을 특화한 사례로 주목해 볼 수 있음

【표 III-13】 다양한 플랫폼 운영 사례와 유형

구분	내용
중앙단위 플랫폼 운영	촘촘한 전달체계 (중앙-광역-기초) (보육)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중(한국보육진흥원)-시도육아중-시군구육아중(가족)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 중앙(한국건강가정진흥원)-시도건강가정지원센터-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자리)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한국여성경제진흥원)-광역여성새일센터-기초여성새일센터
	느슨한 전달체계 (중앙-기초) (돌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 중앙지원(아동권리보장원)-기초 다함께돌봄센터(귀농귀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센터 : 중앙지원(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소속 귀농귀촌종합센터)-시군구 귀농지원센터(독립적 조직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부서에서 담당)
	복합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복합 지원; 중앙지원(사회적경제진흥원)-시도단위 중간지원조직-시군구 사회적 경제조직
중앙단위 플랫폼 미운영	여성농업인 전달체계 : 시군구 여성농업인센터, 시군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 : 시도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자체 특화 운영	경북농민사관학교 : 대학 등 자원연계해 농업인교육 특화
	서울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 여성연구기관에서 여성창업 특화 운영

□ 플랫폼 역할과 조직, 인력 구성

- 중앙단위 플랫폼 조직은 예외 없이 운영지원·교육과 인력양성·사업지원 조직(또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운영지원 조직은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과 중앙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은 주로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 중간지원조직은 중앙 조직 운영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주로 담당
 - 교육과 인력양성은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과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은 주로 지역 센터(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고 일반은 주로 일반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담당
 - 사업지원은 기획·평가와 일반·특성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획·평가에서는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획 및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평가(또는 인증) 작업 진행을 그리고 일반·특성화사업에서는 고유사업은 물론 (지역별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특성화 사업 개발과 진행을 주로 담당하였음
- 중앙 플랫폼 조직의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의 구성은 지역 센터나 조직의 수와 규모

- 그리고 담당업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규모임
- 운영지원 조직은 10명 안팎이었으며 교육과 인력양성은 5~10명 그리고 사업지원 역시 5~10명 정도임

【표 III-14】 운영 사례 조직 및 인력 구성에서의 유사점

구분	대상	내용	인력구성
운영지원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행정적 지원	10명 내외
	중앙 중간지원조직	중앙 조직에 대한 행정적 지원	
교육과 인력양성	광역 및 지역 센터(조직)	지역 센터(조직)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5~10명 내외
	일반	일반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사업지원	기획 평가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획 지역 센터(조직)에 대한 평가(또는 인증) 작업 진행	5~10명 내외
	일반·특성화사업	고유사업은 물론 (지역별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특성화 사업 개발과 진행	

【표 III-15】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 개요

사업명	운영기관명
조직구성	
인력	예산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센터운영지원팀·보육지원사업팀·양육지원사업팀 등 총 3개 팀	
22명	4,942백만원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본부 내 지역아동돌봄사업부에서 업무 담당	
6명(타업무와 함께 담당)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 24,316백만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운영비는 확인 안됨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혁신본부, 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본부,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4개 팀	
127명 (2021년 9월 기준)	29,039 만원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여성경제진흥원
기획총괄팀·평가관리팀·역량강화팀·경단예방팀·정책개발팀 등 5개 팀	
14명	82,740백만원 (전체사업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기획실·귀농귀촌지원실 등 2개 실	
12명	750백만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획관리본부·정책연구본부·창업육성본부·지속성장본부·협동조합본부 등 5개 본부	
128명	73,311백만원

주 : 별도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11개 지역별 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센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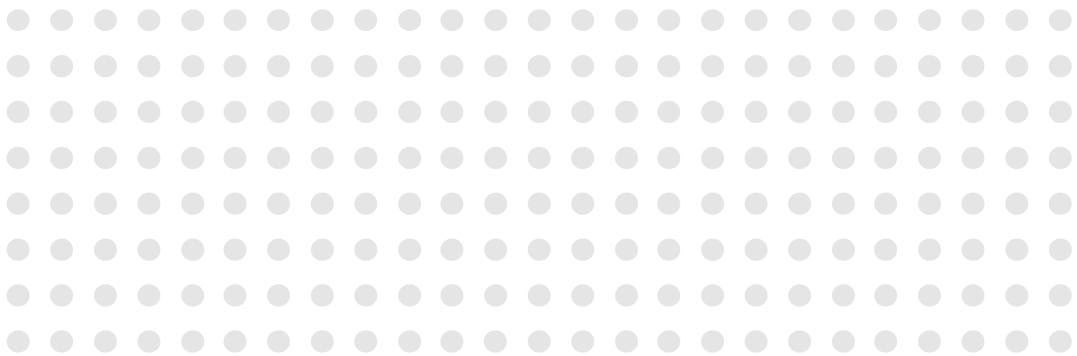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4 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2.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3. 결과정리와 시사점



제 4 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준비사항

- 여성농업인 육성, 창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실시하여 현재의 문제점 진단 및 플랫폼 운영의 필요성,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운영관련 제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함
- 간담회는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음.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취지와 의견을 수렴할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문을 구할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참석하도록 요청함
- 자문 회의 시작 전에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목적, 수행방법, 녹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 후 자료를 녹음하여 의견을 분석하였음

□ 응답자 특성과 진행

- 4회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 참여자는 23명임
 - 1차 간담회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여성청년농업인팀장,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 주무관 및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등 광역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공무원 4명이 참석하였음
 - 2차 간담회는 여성농업인센터장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부안여성농업인센터장, 안동여성농업인센터장, 제주한림여성농업인센터장서천여성농업인센터장, 예산여성농업인센터장, 진주여성농업인센터장, 횡성여성농업인센터장, 고창여성농업인센터장, 총 8명이 참석하였음
 - 3차 간담회는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총 5명이 참석하였음

- 4차 간담회는 여성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회장,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회장,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총 6명이 참석하였음
- 5차 간담회는 여성정책전문가 및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팀장, 경상북도농민사 관학교 팀장, 3명이 참석하였음

【표 IV-1】 전문가 간담회 참여대상과 주제

구분	일시	참여 대상	주제	장소
1차	10.24(월)	전담 부서 공무원	-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등	ZOOM 회의
2차	10.24(월)	여성농업인센터장	- 센터 운영의 어려움 및 문제점 -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등	ZOOM 회의
3차	10.26(수)	연구자 및 전문가	-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등	ZOOM 회의
4차	10.27(목)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등	ZOOM 회의
5차	11.03(목)	유사 플랫폼, 전문가	- 플랫폼 필요성, 역할과 기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플랫폼 운영사례 등	ZOOM 회의


2.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2.1 1차 자문회의 내용


□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역별 사업 활성화

- 현재 농업정책이나 사업 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역별 사업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방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근거와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자문회의 내용


농식품부에서 마침 중앙 조직을 만든다 하니 이걸 좀 지자체에서도 다하고 있는 여성과 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기존에 하던 걸 좀 탈피해서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데 센터들 저항 때문에 어려웠던 농촌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에 대한 업무를 한 것이 지금 한 1년도 안 됐지만 ○○도에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용역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중앙과 시도의 소통, 정보 공유 통한 협업 촉진


- 중앙부서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려움.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중앙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협업이 강화될 수 있음
-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현장 상황과 농식품부의 괴리감 같은 것을 느꼈음. 정책 입안 단계나, 현장에서 추진될 때 확인이 어려우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이 필요함
- 현장 모니터링을 꼭 하면서 사업과 정책이 입안·추진되기를 바람

 자문회의 내용


돌봄이랄지 이런 사업이 확정될 때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농식품부와 괴리감 같은 거를 좀 느꼈었던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책 입안 단계나 아니면 정책이 현장에서 돌아갈 때 확인이 어려우시면 현장에서 얘기한 것들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플랫폼의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문회의 내용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거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농식품부하고 여성농업인단체들과는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시도 단위 담당자들과 소통은 정말 잘 되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농식품부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시도에 홍보자료라도 보내주면은 저희도 참고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제가 플랫폼의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을 꼭 모니터링 해 주시면서 사업을 정책을 좀 입안했으면 해요. 현장 상황이 정말 다르거든요.

○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 필요


- 전반적으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선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환경변화에 맞춰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저항이 커 어려움을 겪음
- 지방이양 사무이긴 하나 중앙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화하는 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지방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이...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접어야 될 판이고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고충 상담을 한다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현 농촌 시점에서 특별하게 여성 농업인들을 끌고 간다. 이런 기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는 시군별로도 역량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시군마다 관심도도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비 같은 거, 좀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군 단위에도 조직을 촘촘하게 구성하려면 국비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손을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침도 국비 사업으로 할때의 지침을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옛날 방식은 좀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 성평등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기존에 하던 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중간지원 조직이 생기면 농촌 실정에 맞게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문회의 내용

시도에서 보통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랄지 기타 사업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 단체를 통한 사업의 경우는 좀 변화를 시켜보려면 저항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예산을 확대하는 거 말고 그 사업의 질을 좀 높여보려고만 노력을 해도 저항이 오고 그러니까 번번이 단체들 예산만 추가 확대 이런 요구에 머무르게 되고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한 표준안 정도는 마련이 되면 단체들의 저항에 있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문회의 내용

중요한 조직 플랫폼이 생긴다면은 각 도의 이 기본계획을 조금 표준화할 수 있는 뭔가 좀 표준화를 만들어서 중앙 플랫폼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거라도 1차적으로 먼저 표준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의 필요 기능

○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표준안 마련·제시


-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사업을 잘 컨트롤하고 목적을 잘 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어려움. 농정원에서 2018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표준안은 물론이고 지방이양 사무이지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플랫폼의 기능임

 자문회의 내용

지방정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에서 하는 걸 왜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할 거냐 중앙정부에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맡기고 우리 도에서 할 거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이라든지 농민을 위해 사업을 해라 실질적인 사업을 해라 그런 입장이지요.

 자문회의 내용


중간지원 조직 플랫폼이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 각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논리가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도에는 센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도비로 나가는데 하는 일이 뭐 있느냐 각 센터별로 기능 역할을 한 번 더 점검해라 그러시죠.

 자문회의 내용


중앙에서는 지방정부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게 컨트롤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농정원에서 2018년에 농업인센터에 대한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14년에 이양이 됐지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표준안을 물론 지방이양 사무지만 한 번 손을 좀 대주시는 것도 시도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인식과 기능 변화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을 변화강화시킬 필요 있으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중간지원 조직이든 농식품부든 여성농업인센터 관리 필요시 반드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마련해야 함
-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할 시 센터에 대한 정비 및 체계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현황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자문회의 내용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의 역량을 키워보려고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나 문화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운영되는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단체에다 위탁을 할지인정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든 농식품부든 여기를 좀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자문회의 내용


이게 지금 중간지원 조직을 농식품부 산하에 기관만 할 건지 아니면 도와 시군구에도 다 하나씩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 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현황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충남이나 전북 경남 제주 같은 곳에는 거의 지역별로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딱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나 도 단위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시군 단위에도 이렇게 다 조직을 촘촘하게 구성을 하려면 국비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경북농민사관학교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지역의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과 협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협업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사실 대학에서 교육 운영을 과정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그 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비 교육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단체든 여성 농업인 관련 연구기관이든 다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좀 이렇게 유도하는 데 참여를 유도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 여성농업인 단체 네트워킹

- 여성농업인 단체를 아우르고 네트워킹을 하는 기능이 요구되며, 따라서 중간지원조직 또는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 각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자문회의 내용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여성농업인 단체가 좀 역할이 단체마다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현장에서 가보면 서로 이게 그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가는 길이 똑같은데도 화합하지를 못해요.

2.2 2차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민센터에 대한 평가와 역할 변화

○ 사업 중복성을 비롯한 부정적인 평가

-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곳과 사업의 중복성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여성농업인센터만의 차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
- 사업 중복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들은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결과임

- 지역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이기도 함

자문회의 내용

농사로라는 사이트도 들어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이제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사업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문회의 내용

다른 기관에서 해도 충분히 그게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게 참 근거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런 부분들이 센터의 위상을 낮춰버리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하던 일을 다른 센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원조한테 너네 중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완전히 설 자리가 없고 아까 새로일하기센터 같은데 여성가족부하고 붙어 있는 데는 그리고 행사부하고 붙어 있는 데는 너무너무 그래도 체계적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나가는데 저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이거는 너무너무 바람을 타는 거예요.

자문회의 내용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농업인센터들은 대개 센터장 한 명 또는 사무장 한 명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니까, 걱정이죠.

○ 향후 역할 변화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역할은 상담임
- 노인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장 활용 사업도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흔들리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위상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자문회의 내용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문화적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사회적 욕구도 충족이 되잖아요. 어울림 속에서 그냥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욕구도 되고 또 이제 교육 중에 농업 관련 지식이나 이렇게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우리 센터 직원이라든가 대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을 해준다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연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회의 내용

우리 센터가 전국적으로 함께 내지는 각 센터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해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왔던 게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상담이었고 하나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었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센터에서 어떤 노인 관련 기관을 할지 그거는 실정에 맞게 하는 거였고 노인 관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센터가 사업장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자문회의 내용

정말 중간지원조직이 우리 센터의 지위도 좀 확보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을 여기는 이걸 한다 이게 딱 없으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흔들리고 더 확대되지도 않고 지금 제일 문제는 여성도 센터가 지금 20년 가까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 문제점과 한계

○ 예산과 행정 지원 부족


- 20년 동안 사업비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교육 후 지원사업에서도 다른 사업들과 달리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필수적인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문회의 내용


저희 ○○○센터는 200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2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20년 동안 사업비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해마다 도대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 뭐다를 말하는 거 자체가 진짜 희한한 거 아닙니까?

 자문회의 내용

무슨 그 사업비보다 사실은 못한 걸 가지고 1년 사업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이 되었다 이거는 못한다 저거는 못한다, 그렇게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해마다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어떨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근근이 사실은 이어오면서 이 사업들을 해왔다는 그 자체로 정말로 다들 박수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문회의 내용


그렇지만 저희는 교육 후에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는 좀 많은 편인데도요.

 자문회의 내용

어쨌든 여성 도우미 센터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는 게 현실인데 다른 대표님들이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성농업인센터를 둘러싼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이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하는 역할들에 비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도 계속 교육도 받고 단련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죠.

○ 모호한 역할 범위에 따른 부담감 가중

-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창업과 일자리 등)을 하기에 부담이 지나치게 큼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들 이야기하면서 창업 얘기들이 딱 떠올랐잖아요. 그 얘기하면 저희는 사실 숨막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까지 일자리까지 창업까지 여성농업인센터가 내 일자리도 수호하지 못하는 판에 일자리 막 이런 게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및 불만


-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제대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개입

이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할당하는 사례도 있음

 자문회의 내용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죠. 200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센터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다 운영 지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이유로 정말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잣대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막 들이대는 잣대에 휘둘리는 그거를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휘둘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문회의 내용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각종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는 거점별로 계속 생기면서 또 그걸 도에서부터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진짜 응원하고 지원해 줘야 할 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발목을 잡아요.


 자문회의 내용

처음에는 센터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센터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게 바뀌는가 싶더니만 코로나 겪으면서 회의를 못하니까 행정에서 그냥 행정 편의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그냥 고쳐서 내리꼈더라고요. 사업비도 동시에 깎이고 인건비도 사업비의 몇 프로로 해서 딱 제한을 시키고 말이죠.


플랫폼 역할에 대한 기대

○ 표준화된 매뉴얼의 필요성


- 여성 농업인을 위한 필수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며 중간 지원조직이 중앙과 지역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역할에 따른 적정 사업비와 인력배치와 교육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매뉴얼이 필요
- 플랫폼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표준화하고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매뉴얼로 인해 센터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을 통해 끼어맞추기식의 역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소수 있었음

 자문회의 내용

지역의 특수 사업도 좋지만 정말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을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를 우선 순위를 쫓 잡아서 그거를 여성 농업인의 필수 사업으로 몇 가지를 내려주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중간 거점이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중앙과 우리 사이에 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같이 합의하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문회의 내용


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또 무슨 중앙정부의 여성 농업인 정책을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 하고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된다는 그냥 저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주려면 그거에 맞게 이제 사람도 배치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올려주고 또 저희한테 나름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메뉴얼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해야되니까 우리들의 역량을 키워줘 가면서 그런 요구도 했으면 좋겠다.

 자문회의 내용


제가 좋은 게 뭐냐면은 메뉴얼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거든요. 고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또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플랫폼 구축한다고 하면 이제 필수로 뭐 해야겠다 해서 또 끼어맞추기 식으로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에 대한 범위 지정 필요

- 여러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 필요
- 다른 기관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사업이 아닌 여성농업인센터만의 새로운 고유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저희 사업 자체가 농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도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도시재생이나 사회적경제처럼 정말 통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그 플랫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문회의 내용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접친다 어쩐다 저편다 그렇게 그냥 우리 하는 일을 홍보하지도 우리가 원조인데 홍보도 안 해주고 사업은 자기네들이 다 모방하고 뺏어갔으면서도 우리가 태클을 건다고 하는데 변화된 시대에는 다른 쪽으로 사업 전망을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 여성단체 간 소통과 협력 강화

- 농촌여성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 완화를 위해서도 조정자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여성 단체들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능 수행을 할 조직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플랫폼 구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능은 여성 단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거기 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농업인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단체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꼭지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문회의 내용


저희 ○○○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고 도에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가 있어서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을 걸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을 하니까 빠지는 단체도 나왔어요. 올해는 결국 농정과가 주관하는 단체들만 남아서 하는 행사로 된 거예요.

○ 역량 강화


-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교육이 필수적임
-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상황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
- 강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자문회의 내용

우리 스스로 여성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영농여건개선 교육을 하기 전이랑 후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엄청 컸었어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역량 강화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이 그걸 많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모든 센터가 강사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훈련 전문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2.3 3차 자문회의 내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촉진

- 공모 사업의 경우 어떤 민간 조직이 받아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의 질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음
- 일례로 양성평등교육원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의한 양성평등 교육 역시 농촌 현실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여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중앙 단위의 실행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정책의 확산성이나 체계성의 문제가 반드시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함

 자문회의 내용

기본계획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라인이 하고 확산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5개년 기본계획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농촌 살아보기 같은 경우에ダイレクト로 민간 조직을 공모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처럼 그것을 어떤 민간 조직이 받아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의 질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문회의 내용

농촌의 마을 단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양평원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감각을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을 과정을 짜거나 강사 섭외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농촌 전문성이 취약한 실행지원 기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는 한계 있는 거죠.

자문회의 내용

이게 중앙 단위 실행지원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확산이 될 거냐 사실 그게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비랑 지자체랑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인 경우에 그렇게 민간 조직을 공모할 때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필터링을 하고 접수를 모아서 중앙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가 지자체 라인이거든요. 중앙 단위의 실행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정책의 확산성이나 체계성의 문제가 반드시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염려가 되는 거요.

○ 여성 농업인의 낮은 수혜율

- 생애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성보호나 보육여건 개선을 제외하면 농촌 여성의 수혜율은 낮은 상황임
- 상대적으로 남성들을 정책 사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임

자문회의 내용

여성 농업인 수혜율이 되게 낮다, 청년 여성 농업 수혜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성 농업인 특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여성 농업이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여성 농업이 특화를 필요하다고 어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문회의 내용


실질적으로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 성주류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수혜율이 굉장히 낮더라 생애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성보호나 보육여건 개선이나 이런 거 빼고는 굉장히 낮더라 근데 이제 낮다라는 게 뭐냐면 여성농업인기본법의 지위 향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위 향상에는 이제 직업적인 지위 향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들을 설계할 때 창업 쪽은 아니고 육성 쪽이에요.

자문회의 내용


왜냐하면, 정책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마무시하게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남성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농업인 특화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필요성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홍보 강화와 인식 개선

-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탁된 소규모 사업이 많아 여성농업은 물론 공무원 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여성 농업인에 대한 중앙정부 추진 사업이 적어 전담 공무원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 임

 자문회의의 내용


우리가 지금 영농 여건 개선 교육이나 농촌 언니 같은 다양한 특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냥 지자체 행정 라인을 타고 사업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받아 너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여성 농업인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이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문회의의 내용

실제로 제가 지역 차원에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곳 실제로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해보면 지역 여성 농업인한테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잘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요. 이게 그냥 공무원의 핑계가 아니라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국비 행정 라인에 따라서 두두두두 떨어지는 양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 때 공무원의 정원을 주는 거거든요.

○ 성별 격차 해소 및 양성평등 인식 개선 필요

-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더욱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한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은 필요함

 자문회의의 내용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은 성평등 전파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문회의 내용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놓고 볼 때는 남녀 농업인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변화를 매개로 하면서부터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어떤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저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지역과 하부 조직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별 사업의 양과 질 모두가 부족한 상황임
- 아래 단위에서 밀착하여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자문회의 내용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내지는 농촌 여성 대상의 교육 사업들이 실제로 교육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질을 높일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위가 사실 없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결국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래 단위에서 계속해서 밀착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자극을 주고 독려를 하고 함께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찾는 고민의 주체를 지금 만들자는 의미 아닐까요.


자문회의 내용

이런 게 정말 확산이 되려면 어쨌든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콜라보 같은 사업 그니까 창업지원이 별개 아니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의 공모서를 써주는 거예요. 공모서 쓰는 약간 수준이 높은 교육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기초 교육에는 여성 농업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약간 고급 교육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잘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되었던 거는 너무 이게 중앙 단위에 중간지원조직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 기관이 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이 중앙지원 조직이 힘을 갖지 못해요.


□ 필요한 기능

○ 사업중심 사업실행 기구


- 연구보다는 사업 실행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 요구됨. 초기 단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연구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사업 실행에 자원을 집중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높아진 기대치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실제 농정원에도 연구기능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문회의 내용

명확하게 사업 실행 지원 기구로 가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연구기능을 넣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돈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이게 적어도 준 공공기관 수준의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가족재단 운영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구자 서너 명 한 개 부서를 가지고 관련된 연구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자문회의 내용


그 조그마한 연구 부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연구중심 기관이 되거나 사업중심 기관이 되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모르겠는데 연구와 사업이 어설피게 섞여 있을 때 갖는 한계가 되게 크고 이게 중앙 단위는 특히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문회의 내용


지금 농식품부 사업의 태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농정원이거든요. 근데 농정원이 교육 정보 뭐죠 또 뭐가 지금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가서 되게 거대한 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조차도 사실은 연구기능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 여성농업인 단체 네트워킹

- 영향력이 큰 여성 농업인 단체(전여농과 한여농 등)를 융합할 수 있어야 함
- 횡단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에 필요한 새로운 활동을 발굴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자문회의 내용


사실 여성농업인 단체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 여성농업인 단체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여성농업인 단체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문회의 내용


농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여농, 전여농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동의 범위라든지 이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단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플랫폼에서 좀 더 기능을 좀 고민해볼 그런 것들은 여성 그룹 활동들을 좀 더 발굴해 주고 또 그런 그룹을 이어주는 어떤 횡단적인 네트워크 이게 이제 각자 지역에서도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모아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플랫폼의 기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촌여성 네트워크

- 지역 네트워크가 없는 새로운 여성 농업인(청년 여성 포함)에게 틈새 일자리 발굴·지원 가능성을 높이게 됨
-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도 포괄하는 것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저는 사실은 여성 농업인들 농촌 여성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틈새 일자리 발굴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농업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건 있고요. 그래서 이 틈새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이 농촌에 사는 여성들 정착을 이제 막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누가 지역 네트워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 지금 여성 농업인 단체 네트워크는 단체끼리 네트워크가 조금 강한 것 같고 약간 이 단체에 가입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되거나 이런 여성 농촌 여성에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성 같은 경우는 멘토건, 멘티건 이런 사업들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 안전망 이런 거는 되게 좀 커뮤니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 내용


여성 농업인 네트워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도 여성 농업인 이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농촌에 진입하는 여성들 그리고 농촌 여성도 포괄해야 되어야죠.

○ 일자리 사업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농업인들에게 취약한 영역은 중범위 수준에서 새롭게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 공모 사업에서 소외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도 늘려야

 자문회의 내용


여성들은 가공식품에 대한 창업에 대한 욕구도 많고 또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좀 표준화되지 않아서 시장성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와 창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통해서도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범위로 역할을 구분해서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분류를 해서 조금 중범위 수준에서의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문회의 내용


요즘에는 각종 공모 사업이 많지만 그런 공모 사업의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여성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공모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촌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정보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도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 농촌 여성의 삶의 질 개선


- 여성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함
- 생애주기에 따른 접근도 중요하며 특히 고령 여성 농업인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 아님
- 고령 여성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이유임

 자문회의 내용

복지나 건강과 관련된 이슈로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는 여성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인력 육성만 고민하면 안 되고 농촌 전반을 보아야 해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열악하니까요.

 자문회의 내용

고령 여성 농업인은 저는 이제 육성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생애주기에 계신 거지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농촌의 노인 돌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에서도 건드리고 행안부와 보복부도 건드리고 요새 국토부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큰 단위에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여성 농업인 내지는 고령 여성에 대한 배려들이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촌에서의 노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가 됐든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한 방식이 됐건 어쨌든 더 확대되고 여성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는 거죠.


□ 조직설립 방안

○ 최종적으로는 별도 기관


- 실행기구로 출발을 해서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가 적절함
- 초기 구체적인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실행기구로 출발을 해서 실제로 일자리 플랫폼 이게 창업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더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일자리까지 커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초반에는 나머지는 정책 실행으로 가면 예 정책을 조금 더 구현을 할 때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지침과 프로그램과 사람과 조직을 엮어내고 만들어내고 이거를 보급하고 이런 역할이 제일 중심일 것 같아요.

 자문회의 내용


정책개발? 개발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당장에는 평가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사업의 관리 지침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성과목표나 성과지표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사업은 이 정도 표준 영역들은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 정책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계속 생산해내는 역할이 저는 정책개발일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활용

- 군 단위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음
- 여성 담당자 보유를 한 명씩은 있음

 자문회의 내용

저는 지금 전국에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다들 군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중간지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실행을 할 때 지방의 행정 단위에서 농정과나 이런 데는 지금 여성농업인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퍼트려 나가게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회의 내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여성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은 그래도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아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만들면 좋겠다, 진흥원과 같은 별도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여성농업인센터

○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개인 의존적인 운영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음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건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지표나 표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모듈을 제한하는 기능을 중앙 실행지원기구가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은 있고요. 이미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 의존적인 방식으로 센터가 굴러가고 있어서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를 실행지원 기구의 필요성이나 기능에서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의 운영이 지금 그 누가 이거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역량 강화 및 필수 사업 지원은 필요

-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

- 협업을 통한 사업 가능성도 고려 가능
-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부부 평등 문제에서는 비교우위에 있음

자문회의 내용

이미 센터가 있고 사실 그 센터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개소 정도밖에 없고 그거는 읍면 단위 커버도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중앙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문회의 내용

만약에 농협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러한 역량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여성 농업인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사업은 필요하겠죠. 공동사업을 안내한다거나 그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회의 내용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부부 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어떤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할이나 이런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그런 중간 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4 4차 자문회의 내용


□ 정부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 접근성의 한계

- 정부 정책은 만들어져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교육과 서비스 있음
- 농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


 자문회의 내용

정책 자체는 뭔가 만들어졌으나 지자체로 내려와서 제대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이 삭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산후조리 그러니까 도우미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문회의 내용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분명 옆에 부모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농촌에서 하다가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둘 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됩니다.

- 부실한 교육 내용과 진행의 어려움
- 농사를 짓는 기술적인 교육이 부족
- 성평등 강사 섭외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자문회의 내용

제가 처음에 이제 농촌에 내려와서도 막상 내려왔지만 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울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뭔가 두루뭉술한 교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내가 농사를 짓는 정말 기술적인 교육은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려온다는 거는 갈수록 더 불가능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문회의 내용

성평등 강사분이 농촌형 성평등 강사분들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 몇 분 안 계시는 분들 연락을 해 보니 일정들이 또 안 맞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올해 보수 교육을 안 받으셔가지고 강사 활동을 이제 내년부터는 못하게 될 것 같고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 엄격하고 어려운 인증과 신고 절차
-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관련 교육이 만들어져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자문회의 내용

창업해서 하려고 하면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세무서나 등기소 업무도 너무 어렵고요.

 자문회의 내용


식품 표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게 정말 저희가 봐도 이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정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이제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게 구체적인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문회의 내용


해썹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규모가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름만 소규모 해썹이지 지원 장비나 시설은 그냥 대기업 회사처럼 똑같이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서 지금 대부분 즉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통까지를 멈추고 해썹으로 못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한들, 지원사업만으로는 가공 공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 현실과의 괴리 발생

- 규모가 있는 농사를 짓는 경우, 교육과 행사 참여가 불가능함
- 귀농인들을 위한 전담 지원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네 근데 설상 진짜 농민 정말로 농사 많이 짓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저희가 항상 얘기도 해봤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농민 진짜 농사 많이 지시는 분들은 거의 한두 분 정도 참여할까 말까 하고 거의 한 2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거의 한 300평 몇 평 1천 평 이하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거의 참여하게 돼 있어요.

 자문회의 내용

막상 농촌에 내려와서 청년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되게 이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잘 모르겠다. 어디 찾아봐야 된다, 아니면 어디를 찾아보고 알아서 와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 플랫폼에 거는 기대역할

○ 새로운 교육 확대

- 규모가 있는 농사를 짓는 경우, 교육과 행사 참여가 불가능함
- 귀농인들을 위한 전담 지원이 필요

자문회의 내용

행정 관련 업무는 여성 농업인들이 정말 쉽게 적 접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성 농업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들을 해낼 시간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더군다나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점에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회의 내용

특히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교육이나 이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이라서 인재가 적단 말입니다. 물어볼 데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의 특성 때문에 일반 세무사 세무회계사 가서 할 수 없죠.

자문회의 내용


교육을 진행하면, 대부분 한 10% 정도만 여성분들이 오고 거의 그냥 남자분들이 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여성들이 사실 거의 농사는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큼직큼직한 거 기계 다루고 이러는 거는 남성들이 하지만 여성들이 소소한 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체계화해서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 농업 분야 교육 내실화


- 농촌정착 지원에 있어 초기, 중기, 장기와 같은 시기적 구분 접근 필요
-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
- 여성 농업인들도 다양한 농기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자문회의 내용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우선은 농촌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뭔가 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장기 단계로 단계 이런 식으로 좀 체계가 나뉘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뭔가 교육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뭔가 조금 장기적으로 농촌에서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멘토 같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이런 필요성을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문회의 내용


시간이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버린다 하지만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만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좀 교육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저도 느끼기를 교육이 아직 질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개선된 사항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조금 시대에 빠르게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회의 내용


이제 어차피 농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성친화형 기계가 아니더라도 우선은 나온 기계들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좀 다룰 수 있게 그러니까는 이런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관리기라도 한두 번씩은 이렇게 진짜로 자기가 운전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 네트워킹 지원

- 여러 단계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규모 인원이 기수를 구분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기회 제공

 자문회의 내용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들이 한 장소에서 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문회의 내용

꼭 정부에서도 이런 여성 농업인들 규모 넓은 옛날에 새마을 교육 시대 보면 500명 진짜 새마을연수원에서 굉장히 그때 생각하면 500명 이상 이렇게 한 기수로 아니면 2기수 3기수 지역 단위로 나눠서 이런 여성 농업의 통합적인 종합적인 프로그램 좋은 건강 교육이라든지 식품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농촌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의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 홍보 강화

- 홍보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자문회의 내용

어쨌든 아까 이제 좀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런 좋은 교육이 더욱더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들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데 참가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 5차 자문회의 내용


플랫폼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점 필요
-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 쪽은 지금 (여성농업인지원센터라는) 발은 있고 쉽게 보면 위애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게 예요. 헤드가 없으면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 유명무실화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도모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죠. 여성농업인들이 센터 만들어 달라고 노력해서 쟁취한 건데 너무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서 그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고, 유명무실해진 여성농업인센터를 좀 활성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중앙새일센터에서 말씀하신 게 지역 센터가 먼저 있고 그걸 통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앙이 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여성 농업인들이 바라는 그런 조직인데 이렇게 됐으니 중앙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어쨌든 문패 달고 예산을 좀 따서 조금이라도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내려주고 한 명씩이라도 고용이 되도록. 건다가 센터 처음 생길 때 한 명 두 명씩 채용한 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 역할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센터가 40개라고 치면 그 40개에다가 지역 고용도 되잖아요. 귀농 귀촌했거나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좀 독특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지금 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완전히 죽어 있으니 기왕에 있는 거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고 중앙하교의 연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그게 모델이 됐을 때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이야말로 기존의 귀농 귀촌 센터라든지 다른 센터랑 연계 파트너십으로 연계하는 걸 만들어 가고...
그런 식으로 가서 명실상부하게 여성농업인지원센터를 가면 이리이러한 것들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표준화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여성 농업인 그런 입장과 새로 유입되는 입장과 또 고용도 창출되고...

자문회의 내용

기초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팔다리가 이 여성농업인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를 새롭게 기능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예산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부정적으로 보자면 없애야 되는 거죠. 진짜 안 되는 곳이라면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고 잘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하면 이게 물갈이도 조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키워주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게.

○ 핵심역할에 집중

자문회의 내용


역할과 기능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기존에 하던 농업정책하교의 중복이라든가 겹치는 거라든가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회복지를 봤을 때 여가부 쪽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다문화지원센터부터해서 별의별 지원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플랫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할할 거는 10개지만 우선 한두 개만 집중하겠다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 기획과 실행의 역할 담당

자문회의 내용

여성농업인 쪽은 지금 (여성농업인지원센터라는) 발은 있고 쉽게 보면 위계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헤드가 없으면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여성농업인 쪽에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기획하는 파트하고 실행파트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은 그 안에서 나뉘야 겠죠. 정책 기획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일단 헤드가 있으면 그 밑에 발은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처음에는 도단의 같으면 한 명이 업무를 하다가 두 명이 업무를 하다가 이게 시군 단위까지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 정주 기반 마련

 자문회의 내용


지금 굳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설득하는 그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인구가 자꾸 노령화되고 교육 대상 인구는 빠지는 상황이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말 미래형 사업으로, 귀농 귀촌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지금 정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성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남자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여성들이 따라오지 않고 가족이 구성이 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이거는 좀 고려하지만 그래도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일자리랑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 플랫폼의 운영 방법

- 기초나 광역지자체 단위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교육의 경우 중앙의 플랫폼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시군의 연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해나갈 수 있음


 자문회의 내용


초기단계에서 여러 센터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활용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해버리면 쉬워요.

 자문회의 내용

먼저 시범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첫째가 교육일 거예요. 중앙에서 큰 틀만 기획해서 시도를 던져주거나,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이 주관이 되어서 시군 단위도 끌어들이고, 대학도 좀 끌어들이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 민간위탁의 경우 자율성은 있으나 안정성 부족. 공공조직 위탁시 안정적 운영 가능하나 유연성 부족

 자문회의 내용
<p>민간 위탁의 경우...지금 여가부에서 사업을 주는 형태가 매년 공고를 해요. 매년 공고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거를 심사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너희가 사업자야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데 이게 한 번 정도만 더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매년 한다기보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10 몇 년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또 연도를 넘어선 사업을 기획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해 사업이 딱 끝나고 그다음 또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다 보니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가 새일에서 나오는 성과들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할 때는 민간이 갖는 다양함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이 약간 한정적이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자율성들이 저희 사업의 다양화, 풍부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p>

 자문회의 내용
<p>저희 예가 아닌 다른 센터들, 광역센터나 지역 센터에서 보면 이게 공공 조직으로 들어가면 뭐랄까 업무를 하는데 탄력성이 너무 떨어져요. 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공공 조직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어서 취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한테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 사업의 방면에서 봤을 때 공공이 운영하는 센터들이 그들의 장점을 그렇게 드러내기 어렵고 약간 조직이나 예산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p>

3. 결과정리와 시사점

3.1 결과정리

□ 1차 자문회의

- 지자체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역별 사업이 부족
 - 둘째, 지방 공무원의 역량 부족과 담당부서 부재 사례 존재
 - 셋째, 지역별 여성농업인센터의 심각한 역량 차이 발생
 - 넷째, 여성농업인센터 관리와 지원에 있어 지방이양 사무로 변화를 겪었음에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 다섯째, 이런 상황에도 중앙과 시도 간 소통과 협업 부족
 - 여섯째, 여성농민 단체 간 상호 협력과 협업 부족
 - 일곱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 확대

□ 2차 자문회의

-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참여한 2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농업인센터가 초기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다른 기관과 단체로 이관된 경우가 많음에도 사업 중복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함
 - 둘째, 사업비가 20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양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셋째,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을 통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기본(또는 고유)업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되어야 함
 - 다섯째,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플랫폼은 여성농업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은 물론 여러 중앙부처에서 진행·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자·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2차 자문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자문회의

- 여성농업인 연구자들이 참여한 3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은 양과 질 모두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홍보 역시 부실한 상황임
 - 둘째, 더욱이 농촌 여성의 수혜율은 여전히 낮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습득에 대한 성별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 발생으로 플랫폼 구축 필요
 - 셋째, 우선 사업중심 실행기구를 만들어 여성농업인 단체 네트워크, 농촌여성 네트워크, 일자리 사업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 넷째, 이 과정에서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농촌 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다섯째, 초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센터와 일정한 수준의 협업도 가능할 것임

□ 4차 자문회의

-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이 참여한 4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촌 여성의 특성과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창업에 있어서도 각종 인허가와 신고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도 포기 사례도 발생
 - 여성 농업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네트워킹 촉진 필요
 -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내실화 및 확대 필요

□ 5차 자문회의

- 타 중간지원 조직(플랫폼) 종사자 및 여성연구기관 종사자가 참여한 5차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농업인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점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 역할 필요
 -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시 핵심역할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하며, 기획과 실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운영시 기초나 광역지자체 단위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의 경우 자율성은 있으나 안정성 부족. 공공조직 위탁시 안정적 운영 가능하나 유연성 부족

3.2 시사점

□ 플랫폼 구축 필요성

구분	의견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부족	▶ 현재 농업정책이나 사업 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부분이 많이 부족해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필요 있음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 민간 조직 공모로 운영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농촌 살아보기의 경우 어떤 조직에서 운영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의 질 편차 큼. 즉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을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 전문성이 취약해 도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강사를 섭외함. 이러한 위탁 운영의 한계가 분명함. 사업의 질 관리나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플랫폼(정책 실행 기구) 구축 필요
여성의 낮은 수혜율	▶ 창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일거리 지원에서 여성 농업인 수혜율이 굉장히 낮음, 지원이 한정되어 공적 영역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남성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수혜를 받으려면 컨설팅 등 많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 과정으로 갈수록 탈락률도 높음.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 조직 필요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영농 개선 교육이나 언니네 텃밭과 같은 다양한 특화 사업이 추진되지만, 너무 소규모로 진행되며 위탁을 주기도 해 여성 농업인들이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음. 이러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함
남녀간 격차의 완화	▶ 여성 농업인의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놓고 볼 때는 남녀 농업인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변화를 매개로 해서 기술 변화를 수반하면서부터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어떤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성 대두됨
중앙과 시도의 소통, 정보 공유 통한 협업 촉진	▶ (중앙부서와)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어려움.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중앙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 가령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시도에 홍보 자료라도 보내주면은 참고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 -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 현장 상황과 농식품부의 괴리감 같은 것을 느꼈음. 정책 입안 단계나, 현장에서 추진될 때 시뮬레이션이 어려우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이 필요함. 현장 모니터링을 꼭 하면서 사업과 정책이 입안·추진되기를 바람

구분		의견
필요한 기능	지역과 하부 조직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업인 관련 사업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콜라보 사업이 많음. 중앙 플랫폼에서 하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콜라보 사업으로서의 창업 지원을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의 공모서를 써주는 것임. 고급 교육에 진입을 잘 못하는 여성 농업인을 케어하는 역할, 여성 농업인 대상 교육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은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기초 단위의 하부 조직까지 필요함. 중앙의 지원 플랫폼은 하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성인이나 농업 기술센터 강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함. 일선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환경 변화에 맞춰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주려고 해도 저항이 커 어려움. 지방이양 사무이긴 하나 중앙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화하는 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구분		의견
필요한 기능	사업 실행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의 기능은 명확하게 사람과 공간, 예산 등 실체가 있는 사업 실행 지원 기구 형태로 가야함
	정책 모니터링,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가 아닌 정책 개발과 환류 기능 필요.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정적 의견을 보임. - 하지만 성평등 지표개발이나 성과 관리, 이런것과 관련된 실무적 직무 개발, 사업의 표준 영역에 대한 가이드, 여성 정책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통계 등)를 계속 생산해내고 체계화하는 역할은 필수라는 의견은 통일성을 보임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표준안 마련·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사업을 잘 컨트롤하고 목적을 다라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 어려움. 농정원에서 2018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표준안은 물론이고 지방이양 사무이지만 한 번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플랫폼의 기능임 -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량의 제한이 없다보니 해야 해서 이것 저것 하며 늘어났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수사업을 내려주고, 그 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

구분	의견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변화 및 강화 유도 등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을 변화·강화시킬 필요 있으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센터 역할 중에서 보육은 (저출생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 대부분은 고충 상담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현 농촌 실정에 맞게 여성 농업인들을 끌고 가는 기능은 약하다고 생각됨.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서포트를 해주어야 되고 일선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니 국비를 좀 지원해서 기능을 강화하던지...아니면 센터 기능 중에서 보육은 좀 잡고 성평등 정책 개발한다든지 해서 센터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플랫폼을 만든다면 옛날 방식은 좀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 성평등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기존에 하던 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음 - 중간지원 조직이든 농식품부든 여성농업인센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할 시 센터에 대한 정비, 체계를 잡아야 함. 지역별로 현황이 다르고 역량이 차이도 큼 ▶ 농협 운영이나 어린이집에서 출발해 전환되는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농업인 센터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이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있음. 또한 성평등 여성농업인 정책이나 성평등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할수 있는 조직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 센터를 끼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미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를 기초 단위로 좀더 확대하고, 중앙 단위의 플랫폼에서 공동의 사업을 안내한다던가 역량 강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로 기존 기능이 축소되거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기능을 가진데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농촌 특성에 맞춘 상담 기능이 중요함. 상담 일지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 상담은 아니지만, 농촌의 현실에서 사랑방과 같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부부 간의 평등한 문제를 접하게 하고 인식 개선을 이룰수 있는 면이 있음. 때문에 여성 농업인 센터의 새로운 역할 방향을 이런 측면에서도 모색해 보며 기능을 좀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그런 중간 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 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여성농업인센터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위한 정기적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 필요함 ▶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구성 필요 ▶ 각 센터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 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기회까지 제공 필요

구분	의견
여성농업인 단체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단체를 아우르고 네트워킹 하는 기능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 단체가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화합하지 못함. 중간지원 조직,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 각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도 포함되면 좋겠음 - 여성농업인 단체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나 역할을 넣어야 함 - 지역의 여성 농업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포함 필요 - 현실적으로 여성 농업인 단체의 힘이 강한테 이 단체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여성 그룹 활동들을 좀 더 발굴해 주고 또 그런 그룹을 이어주는 어떤 횡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능,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주는 기능이 요구됨
농촌여성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유입 농촌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 여성 농업인들 농촌 여성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틈새 일자리 발굴해 달라는 요구임. 농촌에 정착을 막 시작하는 여성들은 지역 네트워크가 너무 없어 틈새 일자리 발굴도 어려움. 특히 여성 농업인 단체 네트워크는 단체끼리 네트워크가 조금 강한 것 같고 약간 이 단체에 가입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되거나 이런 여성 농촌 여성은 어려움을 겪음. 때문에 청년 여성을 위한 멘토- 멘티 등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 안전망 커뮤니티 구축 필요
취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육성도 중요한 역할이므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 단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플랫폼 내지는 일자리 전담팀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농촌형 세일센터의 모델을 제시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연계나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함. 또한 지침과 프로그램, 사람과 조직을 엮어내고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기타 플랫폼의 운영관련 제안사항

구분		의견
조직 설립 방안	단계별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접근 필요 - 타 플랫폼 운영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점점 더 그 역할이나 기능들이 커지고, 그래서 규모나 조직이 커지고 전달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들어짐. 초기에는 예산 등의 한계로 필수적인 기능만 담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되어야 할 기능까지 고려되기를 희망함
	최종적으로는 별도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가 진행중인 농업농촌 기본 발전 계획에서도 농촌여성진흥원 내지는 여성농업인진흥원 이런 식의 중앙 단위에 실행지원기구에 대한 의견 있음. 과도기적으로는 위탁 운영 방식이나 기존 공공기관 내 센터(부서)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별도의 공공 기관으로 들어갈 필요 있음
	농업기술센터 연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단위에 있는 농업 기술센터가 여성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된 경우가 많아, 초창기 모델로는 농업 기술센터를 활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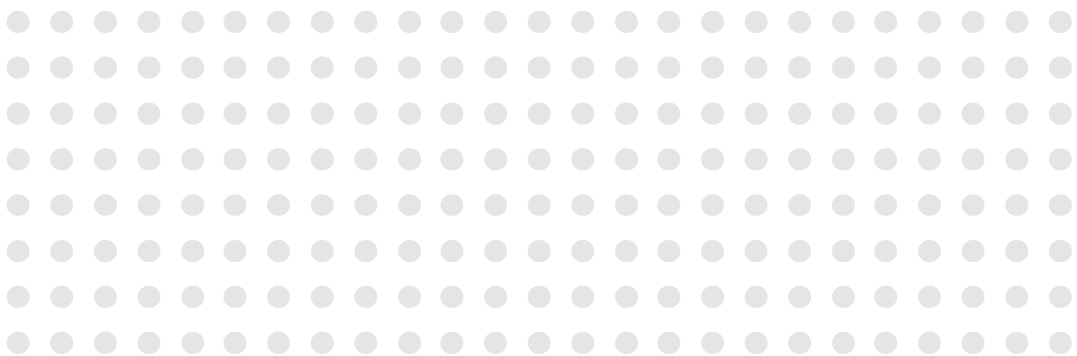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제 5 장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운영방안

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
2.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주요 역할과 기능
3.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조직과 인력 운영
4.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 5 장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 운영방안

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

1.1 정책 수요 측면

1) 농촌 성장 동력이자 주체인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필요

- 농업생산구조 변화, 농업의 외연 확대, 농촌 사회 변화 등 농업·농촌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정밀한 농업노동력 및 기획, 회계에서의 역량 발휘를 통해 성장작목 생산을 주도할 수 있으며, 도농교류에서의 장점과 6차산업, 직거래 등에서 역량 발휘를 통해 농외소득활동 증대에서 기여하고 있음
- 특히 고령농, 귀농, 청년농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마을리더이자 돌봄 및 후원자로서 지역사회 활동 또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농촌사회를 주도해가는 주체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필요

2) 여성의 낮은 수혜율 및 남녀격차의 완화

- 전문가 회의에서는 취·창업, 전문교육 과정의 여성 농업인 수혜율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점 지적됨. 지원이 한정되어 공적 영역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남성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수혜를 받으려면 컨설팅 등 많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 과정으로 갈수록 탈락률도 높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중간지원 조직 필요
- 여성 농업인의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놓고 볼 때는 남녀 농업인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변화를 매개로 해서 기술 변화를 수반하면서부터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을 어떤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성 대두

-
- 영농여건개선 교육이나 언니네 텃밭과 같은 다양한 특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너무 소규모로 진행되며 위탁을 주기도 해 여성 농업인들이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음. 이러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도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

3)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다양화 및 확장에 대응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 비중(51.1%) 및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수요는 갈수록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노동경감 대책과 역량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났지만, 일하는 시간, 농사일 부담, 농외소득 활동 실태 및 애로 점 등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중장년층간의 인식차가 뚜렷함. 때문에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 있어 세대별로 노동경감, 역량강화, 정주 여건 등에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되어 있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에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 역할 증진 및 경제활동,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 증대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이 62.5%로 높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는 농산물 판매(41.6%), 농업 임금노동(24.3%), 농산물 가공(23.2%)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4.17.)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직업역량 강화 정책은 전통적인 작목 위주 농업생산 교육에 편중되어 있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산업분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자동차 설비 운전 외에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판매·마케팅,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업생산기술 등 직업역량 교육에 관한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판매·마케팅 등의 교육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1.2 정책 공급 측면

1)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의 취약성 해소 및 안정적 전달체계 확보

□ 중앙 행정기구의 한시적 운영 및 행정 라인의 취약성 :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구조’

- 현재 여성농업인 육성, 창업지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 지원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역-기초단위까지 이어지는 전담부서 설치가 미진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의 취약성 노정
 - 2019년 여성농업인 추진 부서로 농촌여성 정책팀이 구성·운영 되었으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추진 정책 및 과제로 인한 부담 증가와 함께 농촌여성 정책팀이 2024년 6월까지의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노정
 - 또한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확산되어 오던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인력 등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 지원 기관이 요구됨
 -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 행정 라인은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행정 라인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정부 정책 수행 및 사업 기획·운영을 지원할 중앙단위 지원 조직이 부재함으로써 지자체 및 현장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개발 및 확대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 확보가 관건임
- 타 부처의 경우 중앙지원 플랫폼 역할(가족, 돌봄, 여성일자리 등) 통해 중앙-기초 단위까지 지원 및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례 있어 여성농업인 정책의 경우도 중앙지원 역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지자체 단위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변화 도모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유일한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지방 이양으로 인해 중앙단위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개별성과 격차로 인해 중앙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지원에 어려움이 따름. 특히 저출생 등 농촌사회의 변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센터 현장에서는 각 센터별 역량 차와 사업형태의 차이, 특히 실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는 관할 범위(1~2개의 면지역을 관할 범위로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의 문제 등으로 지역 거점 역할에 제약 요소가 많음
-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가 기초단위에서 중간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정신(2019)와 이순미(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표준화와 객관적 평가와 함께 표준화된 필수 기능과 지역 특화 기능의 구분 등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인력 현실화 등의 변화가 요구됨

2)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사업·예산 증가에 대응, 농어촌 성평등 역량 강화, 청년농업인·귀농인 등 농촌인력 다양성 확대에 대한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중앙 지원조직 필요
 - 1차부터 5차까지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책의 추진 영역의 확장과 함께, 추진 전략의 세부화를 통한 실행의 구체화가 추진되며, 여성 농업인의 정책 과제가 확대되어 옴. 또한 농업 활동 경력 및 농업활동 전 경력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 대상에 따른 정책의 세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
 - 선행연구(이순미, 2021)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불일치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이는 정책 실행 상의 문제로, 지자체의 정책 총괄 및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못한 점과 중앙-자자체-농촌 현장간의 소통과 협의 부재로 보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터 현장까지의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며,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 개선, 개발이 어려워 정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법정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원할 플랫폼 구축 필요

 현장의 목소리
<p>농촌여성정책팀에서 법정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 기본계획은 지자체까지 행정 라인을 타서 확산되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은 5개년 기본계획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p>

- 농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 조직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조직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사업의 질에 있어 편차 발생. 또한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농촌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한계 발생.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 관리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현장의 목소리
<p>지금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농촌 살아보기 같은 경우, 디렉트로 민간 조직을 공모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간 조직이 받아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업의 질이 되게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p>
<p>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양성은 2년째 ○○○에 위탁해서 운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의 마을 단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감각을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을 과정을 짜거나 그런 식의 강사를 섭외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농촌 전문성이 취약한 타 부서 실행지원 기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p>

- 중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분석하여 사업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관련 문제점 및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검토 작업 필요
-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 콜라보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 중앙 플랫폼에서 하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중앙의 지원 플랫폼은 하부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성인이나 농업 기술센터 강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주요 역할과 기능

1.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주요 역할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실행 기구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사회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점 기관 역할
 - 중앙의 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등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신규 사업 발굴·기획, 집행, 관리,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중개자 역할

- 기존의 전달체계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의 수요를 정책, 사업과 연결시키고,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관련 대상과 기관 사이의 협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 담당
 - 정보 수집 및 제공,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재 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등
 - 특히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는 중앙 및 지역차원의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이 요구되는 과제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담당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확산 도모

1.2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목적

- 여성농업인 육성·창업지원 플랫폼의 운영 목적은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청년여성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지원으로 설정함

1.3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주요 기능

□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 기획·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체계적·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 개발·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현재의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 개발·기획 기능은 농촌여성정책팀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원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발·기획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성인지 통계 생산 및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관리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함
 - 이러한 경향은 광역 시도단위,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임. 광역 단위에서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혹은 전담관이 설치되어 지자체 별로 일부 특화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시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각종 성인지 통계 생산을 지원하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규 정책과 사업을 발굴·기획해 시의성 있는 현장체감형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자문회의에서는 정책 기획·개발 기능에 순수 연구를 위한 역할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순수 연구 기능을 포함할 경우 초기단계의 중간지원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 기능 확대에 의한 운영의 어려움, 중간지원 조직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기능은 기존 농업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하고,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에 접목할 직접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 발굴하는 기능으로 제한해 운영할 것을 제안함

현장의 목소리

연구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연구자 서너 명 한 개 부서가 안 된다고 해서 관련된 연구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연구 부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연구와 사업이 어설피게 섞여 있을 때 갖는 한계가 되게 크고 이게 중앙 단위는 특히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거나 성과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실무적인 직무나 성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연구를 일반 연구 정책 연구 기능은 조금 안 맞지 않다. 중앙실행지원기구도 보면 연구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농정원도 없거든요. 명확하게 사업 실행 지원 기구로 가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 사무로는 성인지 평가지표 마련, 여성농어인 실태조사 지원 및 연 단위 관련 통계 생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평등 전과 등을 위한 사업 기획·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아울러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등 기초지자체 단위의 전달체계에 대한 표준안 및 가이드 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사회 변화 속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되어 동력을 잃고, 기능변화 등이 요구되는 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기능에 여성농업인 정책 교육 및 홍보 등 추가 역할을 부여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 사업 기획 및 추진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역량 강화는 현재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목표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 역량강화 및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임. 5차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의 내용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성인지적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및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여성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임
-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영농여건개선 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관리,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교육(사업) 및 역량 강화 교육,

청년여성 농업농촌 일·경험 탐색 교육, 청년여성 멘티-멘토 지원 등 농촌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비롯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여성일자리 창출 및 교육,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시설 등 창업 및 경영 지원(사후관리 의무화), 창업에 필요한 경영·회계·세무·마케팅·기획·인허가,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통한 농촌, 농업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아울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등도 필요함

□ 양성평등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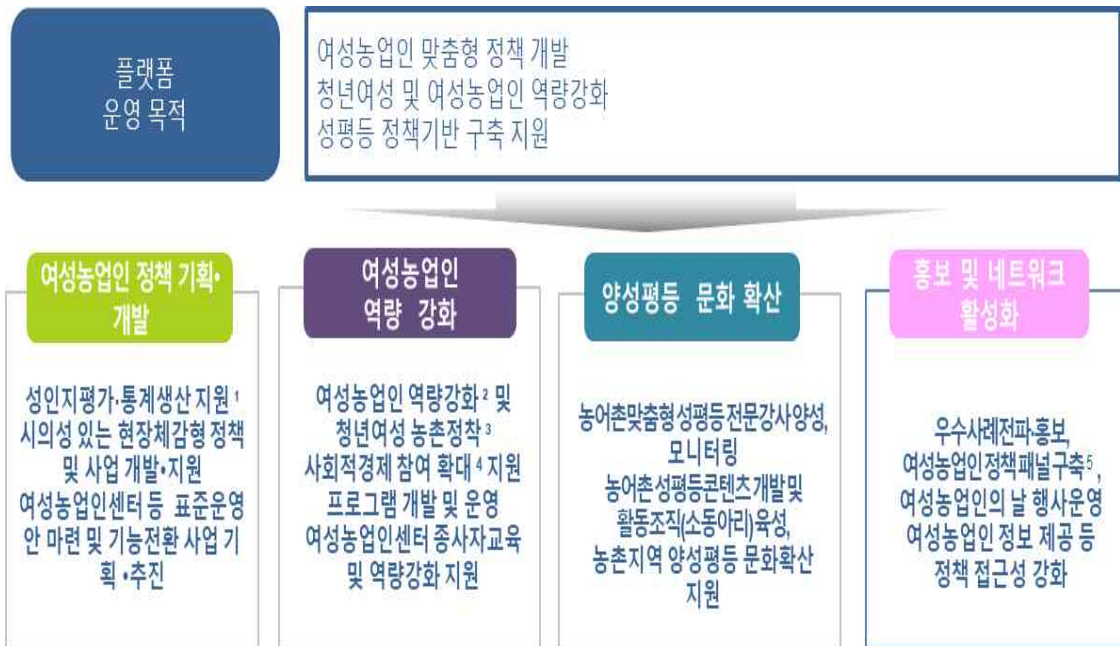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목표에 포함되어 강조되고 있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도 플랫폼의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음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상 이에 해당되는 중점추진과제는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에 해당됨
- 여성농업인들이 농어·농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강하게 남아있는 전통적 의식 및 가부장제의 문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기회 및 수혜가 제한되어 있고, 또 농촌만의 문화적 특성에 바탕한 성평등 인식 및 문화의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 요구됨
-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은 농어촌맞춤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농어촌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활동조직(소동아리) 육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연계 등을 통한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 정책 패널 구축, 여성농업인 단체 간 정보교환 등 소통 지원 및 홈페이지 개편 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전문가 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비롯한 네트워킹 및 신규 유입 농촌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그리고 지속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여성농업인 정책 패
널 구축,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농촌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농촌 자원의
DB 구축, 우수사례 전파, 홍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아울러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등록, 가족경영협약 활성화 등의
사업을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추진·확산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운영 목적 및 역할과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과 같음



¹성인지 평가지표 마련, 여성농업인실태조사지원 및 농업·농촌관련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

²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용관리, 알기쉬운세무회계,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교육, 리더역량(기획력, 해외선진지견학, 자격증) 등

³청년여성 농업농촌 일·경험 탐색교육, 청년여성 멘티·멘토 지원 등

⁴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사회적 경제 조직화 유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노노케어, 공동보육, 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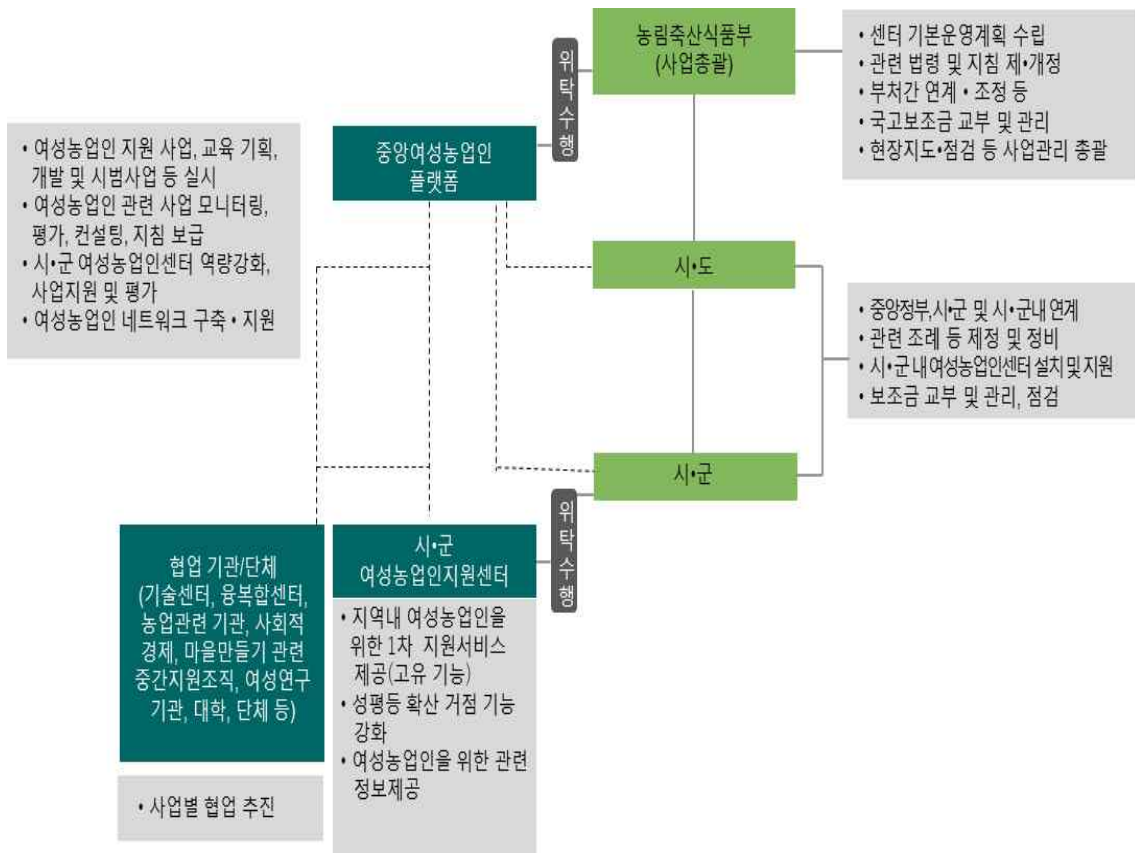
⁵여성농업인 홈페이지 개편·운영 지원, 양성평등 실천 사례 및 홍보, 여성농업인 및 단체 간 정보교환 등 소통 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수기 공모전 운영 등

【그림 V-1】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목적 및 역할과 기능

3.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의 조직과 인력 운영

1.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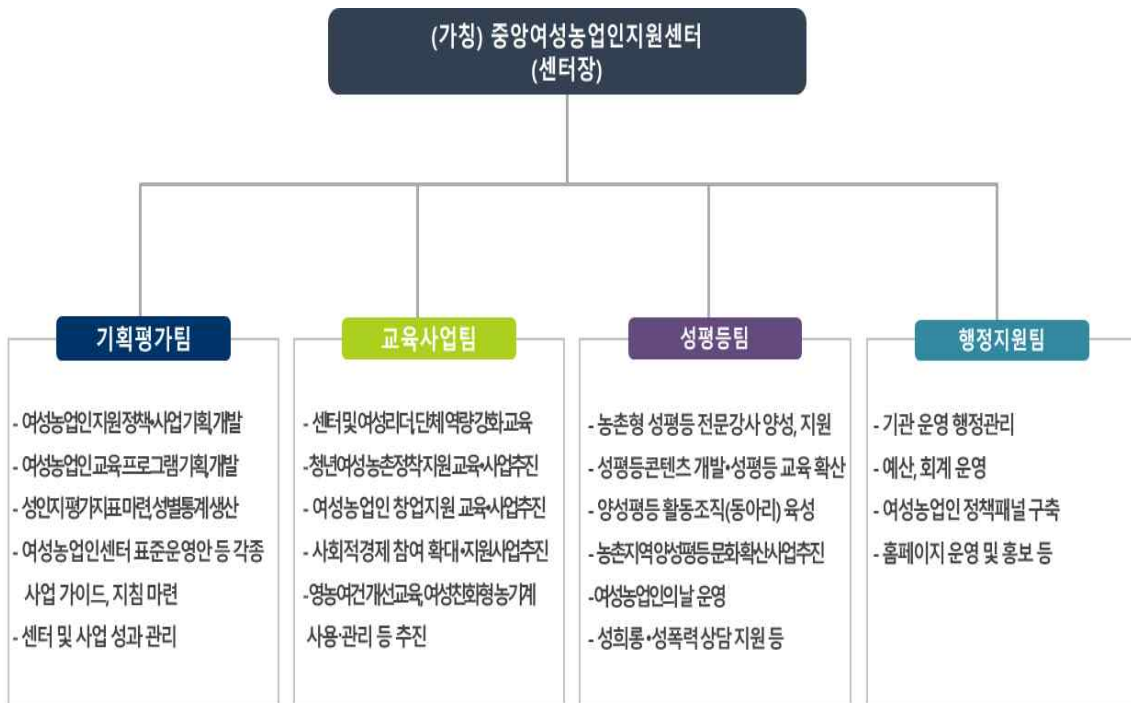
- 행정 담당 부서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 지원 플랫폼((가칭) 중앙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함. 중앙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여성농업인 지원과 관련한 사업, 교육 기획·개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며,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지침 등을 보급하고 시군 여성농업인센터의 역량 강화와 사업지원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함. 이 외에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담당함
- 현재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의 플랫폼(중간지원조직)은 전무하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일부 운영되고 있음. 기초센터에서는 지역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1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유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성평등 확산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영농여건개선 교육 등 포함) 등의 역할을 담당함
- 광역 및 기초단위의 몇몇 여성농업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 및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여성정책 연구기관, 대학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V-2】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및 전달체계

1.2. 조직 구성 및 업무(안)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인 (가칭)중앙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은 주요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3개 팀, 즉 기획평가팀, 교육사업팀, 성평등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총 인원은 14명이며, 센터장(1명), 기획평가팀(3명), 교육사업팀(4명), 성평등팀(3명), 행정지원팀(3명)임



【그림 V-3】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조직 구성

- 센터장은 여성농업인지원 플랫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임
- 기획평가팀의 업무는 ①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 기획, 개발 ②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③ 성인지 평가지표 마련, 연단위 성별통계 생산 ④ 여성농업인 센터 표준안 등 각종 사업 가이드 지침 마련 ⑤ 센터 및 사업 성과 관리임
- 교육사업팀의 업무는 ① 센터 및 여성리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② 청년여성 농촌정착 지원 교육 및 사업 추진 ③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교육 및 사업 추진 ④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및 지원 사업 추진 ⑤ 영농여건 개선교육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관리 등 추진
- 성평등팀의 업무는 ① 농어촌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등 지원 ② 성평등콘텐츠 개발 및 성평등 교육 확산 ③ 양성평등 활동조직(동아리) 육성 ④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⑤ 여성농업인의 날 운영 ⑥ 성희롱·성폭력 상담 지원 등
- 행정지원팀의 업무는 ① 기관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관리 ② 예산, 회계 운영 ③ 여성농업인 정책패널 구축 ④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추진 등임
- 세부업무에 대한 분장은 아래 표와 같음

【표 V-1】 부서별 업무분장 및 인원

팀명	인원	업무분장
센터장 1(3급)		센터 업무 총괄
기획 평가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센터 및 사업 성과 관리
	팀원 1(6급)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 기획, 개발 여성농업인센터 표준운영안 등 각종 사업 가이드 지침 마련 성평등 지표의 개발·보급, 정보수집과 동향 분석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지원 및 성별통계 생산, 각종 DB 구축
	팀원 2(6급)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교육운영 지침 및 가이드 마련
교육 사업팀 (4)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교육 실적 및 성과 관리
	팀원 1(6급)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리더 등 역량 강화 교육 영농여건 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용·관리 등 추진 및 상담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 및 협의체 운영
	팀원 1(6급)	청년여성 농촌정착 지원 교육사업 추진 및 상담 (청년대상 농업, 농촌 일-학습 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착사례집 제작 ·배포/ 청년농업인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및 정착 지원/ 선배 여 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팀원 2(6급)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지원사업 추진 및 상담 (창업에 필요한 경영, 회계, 마케팅, 세무, 인허가 관리 등)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 지역농산업 분야 일자리 수요조사 및 컨설팅 제공/ 농업 정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온라인 판매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사회적경제참여 확대·지원사업 추진 및 상담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화 유도, 사회적경제 영 역에서 여성일자리 개발·창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성평등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성평등 교육 확산 지원, 연계 등
	팀원 1(6급)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신규, 심화 교육, 파견 등) 농업·농촌 교육기관, 강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양성평등 활동조직(동아리) 육성
	팀원 2(6급)	성평등콘텐츠 개발(온/오프라인) 및 성평등교육 확산 유관기관 협업으로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의 날 운영
행정 지원팀 (3)	팀장 1(5급)	팀 업무 총괄
	팀원 3(급)	예산, 회계 운영
	팀원 3(7급)	여성농업인 정책 패널 구축 및 네트워크, 각종 정보 수집, 홍보

1.3. 소요예산(안)

- 전체 예산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해 약 3,600백만원 정도로 산출하였음.
세부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음

【표 V-2】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운영비	725	- 상근인력 인건비 625백만원(상근인력 15명) - 사무실 경상비 100백만원(임대료·운영비 등)
여성농업인 정책 기획 및 평가	175	- 성인지 평가 및 통계 생산 지원 100백만원 - 표준운영안, 각종 가이드라인 및 지침 생산 지원 75백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단체 등 역량 강화 지원	800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및 영농여건 개선 교육 등 추진 60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단체 여성리더 등 역량 강화 및 여성농업인인 지역활동 리더십 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운영 200백만원
청년여성 농촌정착 지원 교육·사업 추진	600	- 청년여성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500백만원 - 청년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엔티-멘토 제도 운영 100백만원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지원 사업 추진	950	- 여성농업인 교육, 현장 컨설팅 및 상담 지원 850백만원 -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100백만원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력 육성 및 콘텐츠 개발	350	- 농촌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00백만원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활동조직(소동아리) 육성 150백만원 -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및 정책홍보 100백만원

【표 V-3】 세부 소요 예산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백만원
- 상근인력 인건비	- 센터장(3급) 5,707,000원×12월×1명=68,484,000 - 팀장(5급) 4,183,900원×12월×4명=200,827,200 - 직원(6급) 3,121,300원×12월×8명=299,644,800 - 직원(7급) 2,518,500원×12월×1명=30,222,000	625
- 사무실 경상비(임대료·운영비 등)		100
- 성인지 평가 및 통계 생산 지원		100
- 표준운영안, 각종 가이드라인 및 지침 생산 지원		75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및 영농 여건 개선 교육 등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전환 시범사업 10백만원×10개소=1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교육 500백만원	600
- 여성농업인센터, 단체 역량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지역활동 리더십 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	- 여성농업인센터, 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지역활동 리더십 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100백만원	200
- 청년여성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		500
- 청년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멘티-멘토 제도 운영		100
-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및 사회적 경제 교육, 시범사업 추진(컨설팅 및 상담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 교육 및 시범사업 추진 85백만원×10개소 - 우수사례 발굴확산 100백만원	950
- 농촌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100백만원	100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활동조직(소동아 리) 육성	- 성평등 콘텐츠 개발 100백만원 - 활동조직(소동아리) 육성 5백원×10개	150
-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및 정책홍보		100

주 : 인건비는 2022년 공무원 호봉표를 참고하였으며, 3급 20호봉, 5급 15호봉, 6급 10호봉, 7급 7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으로 산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업무편람

1.4. 운영방안

-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운영주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간접관리 방식으로 구분할 있음.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행정부서 관리형, 사업소형으로 구분됨. 행정부서 관리형은 자치단체 산하의 관련 부서의 과 또는 계 수준의 직제로 운영하는 형태이며, 사업소형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간접관리 방식의 경우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 위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음(서희석·류지원, 2012 : 68-72 ; 최유진·마경희·정수연, 2013 : 129-130 재인용)
- 각 운영주체별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리잡힌 이후에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V-4】 운영주체별 특성

구분		장점	단점
행정 부서 직영 방식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	- 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에 강점	- 공무원의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 성향 -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확보의 어려움
간접 관리 방식	시설은 중앙/지자체가 소유하나 전문성 갖춘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도모	- 조직운영 안정적,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 가능 - 해당분야 전문성 갖춘 별도 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의사결정권이 실무를 하지 않는 이사회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초래 - 기관운영 방식이 관료적, 권위적일 수 있음
	재단법인 설립·위탁 민간 위탁	- 전문성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	- 운영단체의 계약기간이 불확실하고, 직원 신분의 불안정성,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있음

자료 : 서희석·류지원(2012),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에 따른 성과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 68-72 및 최유진·마경희·정수연(2013),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 129-130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사회적경제진흥원처럼 독자적 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 조직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운영 등을 고려했을 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인 방안일 것임
- 위탁가능한 기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표 V-5】 위탁 기관 예시

구분	장점	단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농, 청년농 육성 및 디지털 농업 확산, 귀농귀촌 활성화 등 추진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풍부 - 각종 교육 및 농업관련 상담,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네트워킹 등 역량 보유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는 풍부하나 여성농업인 및 젠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업, 농촌관련 조사, 연구,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 발굴기획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통계 및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강점 - 여성농업인 및 젠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연구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삶의질 정책 연구센터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지 않을 것임 - 사업실행 조직으로서의 경험 부족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 (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 및 젠더 의식에 강점 - 여성농업인 연구 추진 등을 통한 농촌여성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도 있음 - 연구기관으로서의 강점 외 광역여성새일센터 운영 및 FTA교육홍보사업선정·추진 등 사업실행 기관으로서의 강점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기관만큼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고, 광역자치체의 위탁 의지가 있어야 함

4.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 법적 근거 마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체계 및 여성육성기본계획의 실행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대한 인식은 미흡함. 때문에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13조의 조문 개정이 요구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33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7조(심의회),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2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3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 14조(권한의 위임)부칙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현재의 여성농업인 육성법은 위와 같은 조문체계를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및 실행을 위한 방안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와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음

- 특히 제 13조는 현재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조문에 포함하고 있음. 때문에 중앙의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문 개정이 요구됨
- 중앙단위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별도 조항 신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 설치·운영) ①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 성평등 확산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창업지원 플랫폼(이하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및 사업 기획·개발 및 조사
2. 여성농업인 및 관련 시설, 단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훈련
3. 성인지 평가 지표 마련 및 성별통계 생산
4. 농촌 양성평등 문화 확산
5.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농림수산식품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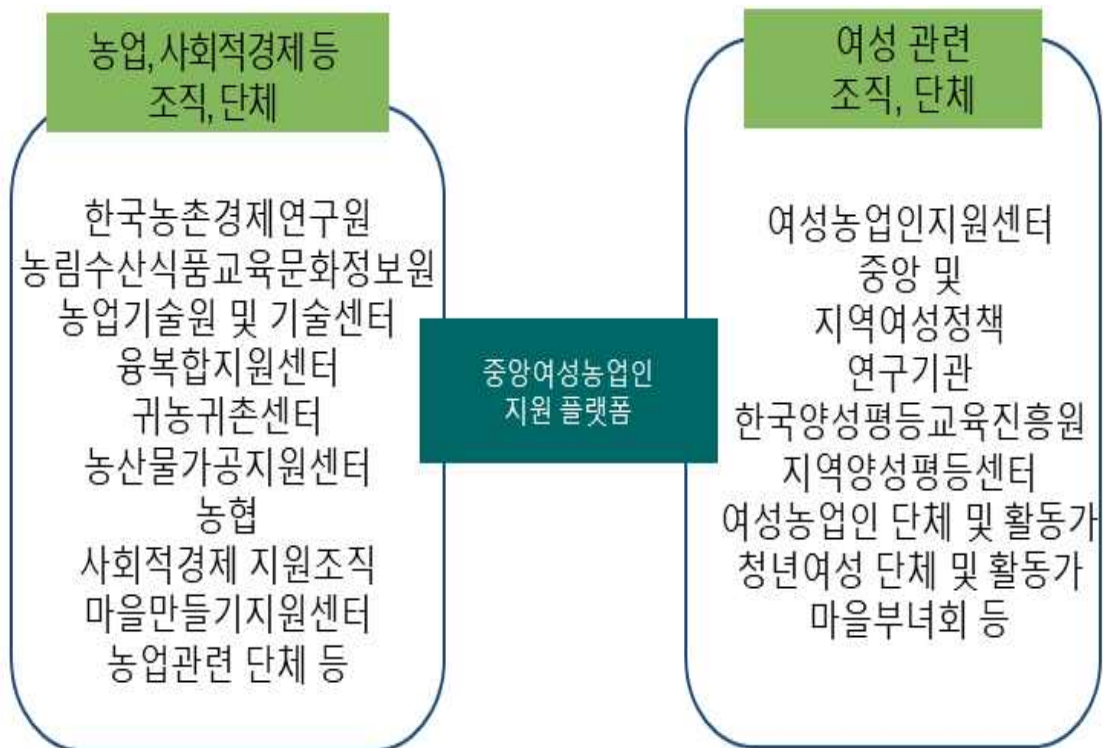
- (가칭)여성농업인 육성 창업 지원 플랫폼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지원플랫폼 운영 사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육아종합 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설치 운영 직원 구성 직원 자격요건 및 기능(대통령령)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3조	설치, 운영 기능 및 설치 기준 종사자 자격
한국가정 건강진흥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설치 운영 직원(건강가정사 등) 자격요건 및 직무(대통령령) 민간 위탁할수 있음(여성가족부령)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
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지원센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기관 설치 운영 지원기관의 업무 전담 인력 및 조직(대통령령)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센터 지정 전문인력과 시설(대통령령) 센터의 수행 사업

- 각 센터에 대한 법과 시행령 등에 설치 운영, 조직 구성 및 직원 자격 요건, 별도설치 및 위탁 운영 여부, 센터의 시설 및 업무, 수행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1.2.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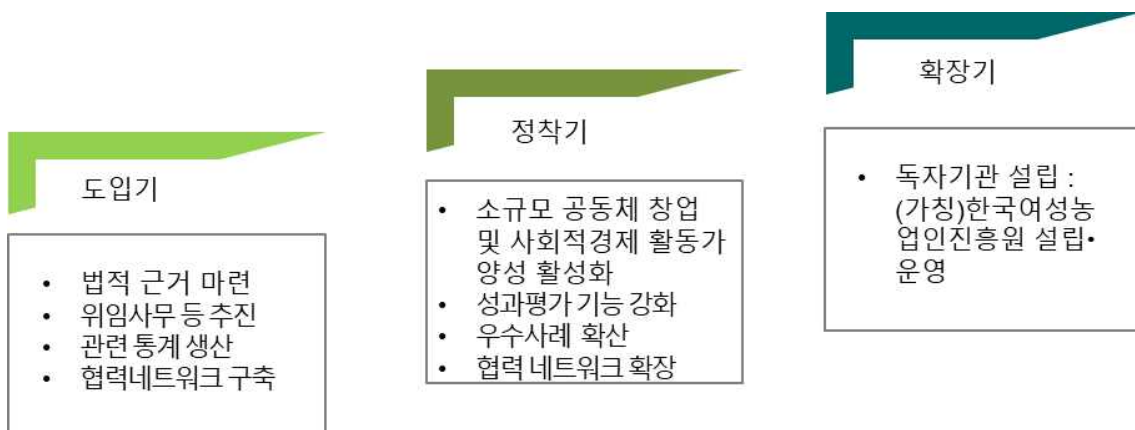
- 중앙단위의 지원 플랫폼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의 미약함으로 인해 초기 운영단계에서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농업,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해 중앙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과 사업에 대한 기획, 교육운영 등에서 협업할 수 있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는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융복합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협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여성과 관련해 협업할 수 있는 곳으로는 중앙단위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각각 정책개발 및 교육 등의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양성평등센터, 여성농업인 단체 및 활동가, 청년여성 단체 및 활동가, 마을 부녀회 등과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림 V-4】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협업 기관, 단체 예시

1.3. 단계별 발전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칭)한국여성농업인진흥원과 같은 독자적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플랫폼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사무를 일부 위임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역량강화와 기능전환에 대한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기획·추진 및 실행기관으로서의 출발하되, 향후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여성농업인이 특화되어 활동할 수 있는 돌봄과 먹거리 가공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의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 기존 정책사업 중에서 여성특화사업을 별도 선정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예산),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예를 들면, 농촌 마을단위 부녀회를 중심으로 돌봄 사업과 먹거리 관련 가공, 유통 등의 마을기업을 묶어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발굴 및 추진
 - 특히 농촌지역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마을단위로 묶고, 마을 부녀회가 지역 주민의 돌봄 주체가 되며 여성농업인센터는 마을 부녀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이에 플랫폼 도입기-정착기-확장기에 따른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V-5】 여성농업인 지원 플랫폼 단계별 발전방안

참 고 문 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강혜정·김윤희·박서운. 2019.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21.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2020.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정책국 업무편람

농산물 품질관리원. 2020 농업경영체 등록연감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연감분석자료집-농업인력 현황

박민정. 2022. 경북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서희석·류지원. 2012.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에 따른 성과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신승배·손태주. 2020.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안석·엄진영·박지연.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최용호·박지연. 2019.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미란. 2021.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과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순미. 2021. 지방자치단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김정섭·김남훈·하인혜. 2020.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임소영·김정섭·김남훈·하인혜. 2020. 제5차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향-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민선. 2021. 농업 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은미·김동훈·오미란. 2017.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정은미·김태환·박은지. 2021.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제도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유진·마경화·정수연. 2013.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설립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최윤지. 2020. 여성농업인의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3차 농어촌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최정신·최윤지·황정임·홍은정·김가희. 20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가이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제5차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2022),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황경진(2020),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정책 수립 연구, 중소기업연구원